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로써 국세에 편중됨에 따라 많은 지방정부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영유아보육, 기초연금과 같이 국가최저수준의 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국가 정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방은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은 우리헌법의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에 전국시도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국회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지방재정 현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부동산 위주 지방세 구조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신장성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지방세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를 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정부 약속과 같이 16%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
2. 지방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었으나,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지난 2006년 19.24%로 확대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1%까지 인상해야 한다.
3.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을 활용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보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및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포괄보조를 확대해야 한다.
4.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깊이 공감하나, 연금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업이므로 100% 국가재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국가재정 여건상 지방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방이 분담하고 있는 재원규모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5.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16조원이 넘어 감면률이 23%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례에 의한 감면은 900억, 0.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가의 정책목적 감면이므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
6. 총 지방소방예산 3조 1,000억원 중 지방비 비중이 98.2%로 국비비중은 1.8%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고려하여 국고보조 확대 및 보조율 인상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관련 세제개편도 고려해야 한다.
7.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하여 노인양로, 정신, 장애인 시설 등 분권교부세 3개 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계정 신설·이관 등 개편내용이 지방의 자율사업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8.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마치 중앙정부의 재원처럼 활용하고 있는 작금의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지방이 재원운용을 협의하는 중앙-지방 재원협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2014. 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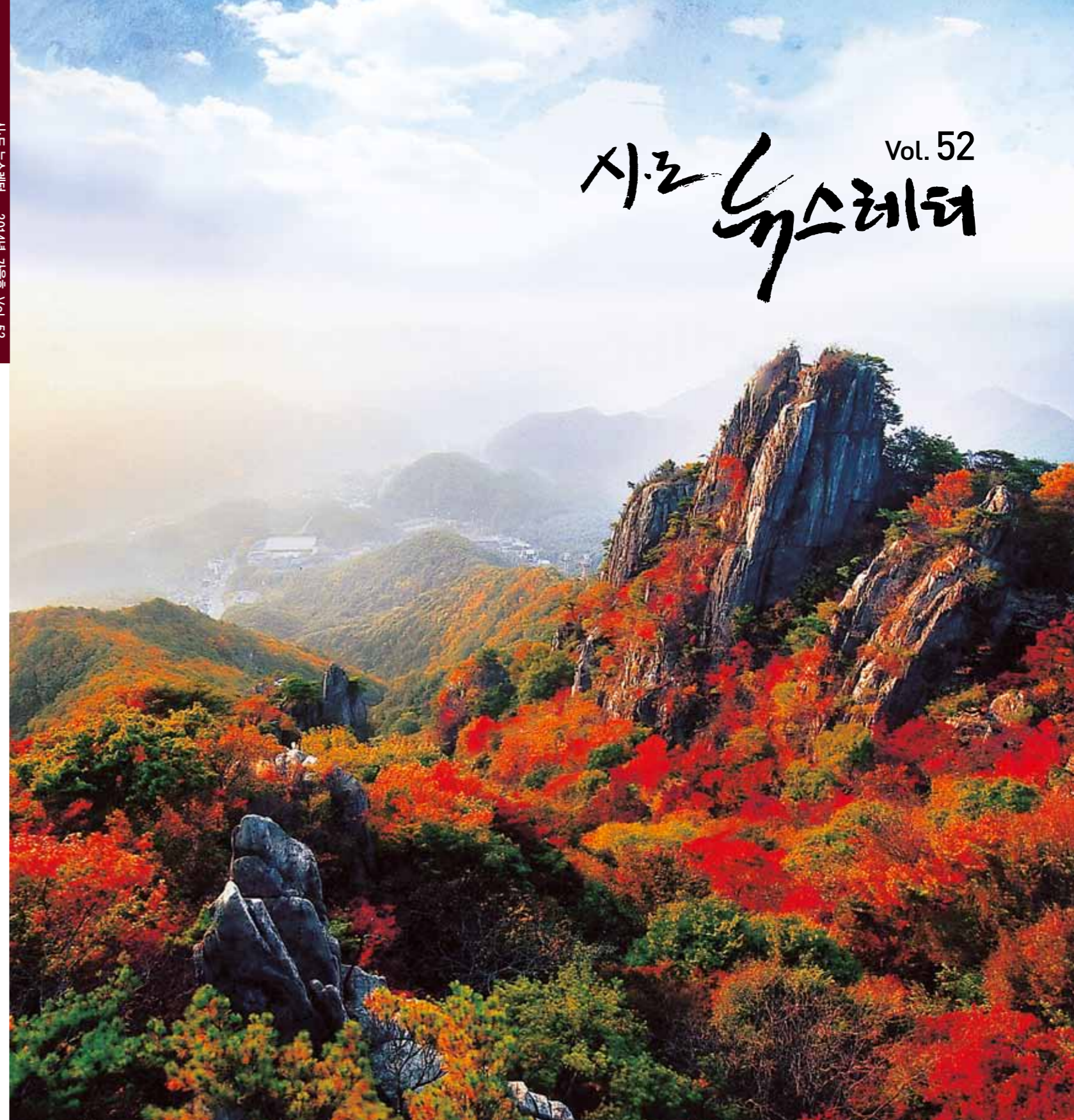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외 16인

시도 뉴스레터 2014년 가을호 Vol. 52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 2014년 가을호 통권 52호 | 2014년 9월 24일 발행 | 등록번호 서울 중·마 0038 | www.gaok.or.kr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 뉴스레터 Vol. 52



원주 대둔산

2014. Autumn

시도지사코너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시책 소개 |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시도 기행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집중조명 | 국가개조, 지방분권으로부터

국제화 현장 | 예스 구미,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의 장으로 피어나다

국제화지원정보 | 한·일 지자체 교류의 장, 한일지사회



www.gaok.or.kr
전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INCHEON 2014 ASIAN PARA GAMES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4.10.18 - 10.24

- 주 최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
- 주 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장 소 인천광역시 및 인근 도시
- 참가규모 42개국 6,000여명 (선수 4,500명, 임원 1,500명)
- S N S blog.incheon2014apg.org
- 홈페이지 www.incheon2014apg.org



시각 뉴스레터 Vol. 52



발행일 2014년 9월 24일(통권 52호)
발행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시종
등록번호 서울중·마0038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계천로 85, 16층(관철동, 삼일빌딩)
편집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이종범
편집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기획홍보부
전화 02-2170-6024
팩스 02-2170-6081
디자인 (주)코비즈(02-2272-1400)

※여기에 실린 기사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시각뉴스레터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www.gaok.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14. Autumn



- 04 **신임회장인사말**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 06 **시도지사코너**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22 **시책 소개**
대전광역시, 대전시민대학 평생학습으로 행복해지는 힘을 기르다
전라북도, 삼락농정으로 농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클라우드 GIS 포털 서비스
- 34 **시도 기행**
광주광역시 | 광주의 미인미락과 함께 떠나는 가을 여행
울산광역시 | 영남 알프스로 오감이 즐거운 울산 가을 여행
- 42 **집중조명**
국가개조, 지방분권으로 부터
정순관 |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성호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50 **정책연구**
중앙-지방 지방재정부담 협의제도 도입되어야
- 52 **기획특집**
중동의 새로운 변화와 이해
- 54 **국제화현장**
에스 구미,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의 장으로 피어나다
- 58 **지방정부소식**
지방정부 주요 행사 및 국제교류 소식 소개
- 64 **월드리포트**
토론에 강한 나라 프랑스, 주민 토론으로 공공갈등을 줄이다
- 68 **국제화지원정보**
한·일 지자체 교류의 장, 한일지사회
- 70 **협의회동정**
제30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지역발전을 위한 MOU 체결
제8회 지방공무원 외국어스피치대회 개최
대학생 SNS 홍보단 3기 해단식 및 4기 발대식 개최
- 73 **명작이야기**
유령이 나타났다, 글래미스 성
- 74 **시도 축제**
시도의 맛과 멋을 즐기는 가을 축제
- 78 **생활 속 건강**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구나! 다채로운 우리나라 추석 음식
- 82 **여행 스케치**
신비로움을 품은 가을 정취 속으로 청풍명월 고장, 충북 제천
- 86 **영어카툰**
Punctuality is the politeness of kings. - Louis XVIII(루이 18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8대 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지난 7월 25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29차 총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추대되어 17개 시도의 뜻을 모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시·도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서로의 역량을 결집시켜 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지방소비세율 인상, 협의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한 지방분권 의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 등 의미 있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역대 회장들께서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한 헌신에 따른 결과로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가 개막한 지 약 20년이 경과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40년간 지방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살려 시도지사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자치 정착과 지방 공동발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 자치제도, 정책결정과정 측면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초연금 도입, 학교무상 급식비 및 각종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재정은 갈수록 악화돼 올해 지방재정자립도가 4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앙 의존적인 지방재정구조 개편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6%까지 확대하고,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율 8:2를 6:4정도로 개편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구조상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성 및 특수성에 맞는 지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 조직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지 않아 단체장은 실·국 하나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조례 제정의 범위도 제한돼 있어 지방의회마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해 행정기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 운용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등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지방은 분권의 이름으로 의무와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배제되어 왔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행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을 제도화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상설기구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방의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17개 시도의 양보와 협조 속에 대승적 차원의 상생발전을 기대하며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이 국가사회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 큰 경북의 꿈 완성을 위한 새 출발 경북발전을 위한 중단 없는 전진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이하 경북)는 지난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3선 광역단체장이 선출되었다. 그만큼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대한 도민들의 믿음과 기대가 크다. 김관용 도지사는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시작으로 병무청, 국세청, 청와대 등 다채로운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다. 민선 구미시장을 3차례 연임하여 기초와 광역을 합쳐 6선 단체장이 된 그를 두고 주변에서는 '지방자치의 산증인'이라고 말한다. 똑심 있고 노련한 그가 이끌어갈 경북의 민선 6기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경북 새출발, 민선 6기 도정발전 방향 이끌어

지난 6월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진 '경상북도 새출발위원회'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도정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경북 대개조를 위한 전권을 위임 받아 경북 새출발 5대 아젠다를 선정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경북 새출발 5대 아젠다는 △공공개조 △경제혁신 △민생행복 △안전개혁 △사회상생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민선 6기 공약 내용과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바라는 '일자리', '민생', '안전', '고향', '가족애'의 이른바 '공감나눔 5대 정책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위원회는 이를 가장 잘 반영하고 도민들이 가장 공감하면서 성과를 기대하는 공약·시책인「경북 새출발 10대 생활공감 약속」을 선정하고 도민들의 생활과 연결되고 성과를 체감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공약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번에 선정·제안된「경북 새출발 10대 생활공감 약속」은 앞으로 작지만 내실 있고 따뜻한 도민 체감형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중점 추진될 전망이다. 경상북도 새출발위원회는 3선이 되는 김관용 도지사 체제 하에서 기존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경북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간다는 경북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도민 속으로 들어가 방향을 찾고, 실천 방안도 현장 속에서 찾아 오로지 도민을 위해 달려가겠다는 김관용 도지사의 철학이 담긴 위원회였다.

실물경제의 전문가로 평해지는 하춘수 위원장을 필두로 각계 각층의 젊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춘 전문가들과 23개 시·군 지역 대표, 여성, 장애인, 청년, 농민, 노동계, 다문화 등 직능대표들로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그 이유이다. 경상북도 새출발위원회는 활동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하춘수 위원장이 김관용 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 개혁과 실천을 당부하고 7월 2일 해단식을 끝으로 활동을 마감하였다.

좋은 일자리 10만 개, 투자유치 3·3·7 전략

민선 6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일자리와 지역경제발전을 꼽고 있다. 투자유치 30조, 좋은 일자리 10만 개로 취직 걱정 없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데 도정 방향의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우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일자리 뉴딜정책'을 수립하여 청년창조일자리 1만여 개, 투자유치와 중소기업지원 일자리 2만5천 개, 고졸 스타인재 양성 1만 명, 청년창업 일자리 1천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여성일자리 사관학교'를 운영하여 다양한 여성 일자리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듯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위해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정립하고, 투자유치 30조 원 달성을 위해 투자유치 3·3·7



새출발위원회



청년일자리현마당

“ 취직 걱정 없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데 도정 방향의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발대식

전략과 수도권과 해외기업 유치방안 등 한 단계 더 높은 유치전략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3·3·7 전략은 IT, 항공부품, 자동차 부품, 레저서비스 등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대상으로 투자 30조 원, 유망기업 300개를 유치하고 의료기기, 백신, 건설기계 등 7대 산업분야의 기업유치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투자유치 전략수립과 현장 실행의 Two-Top 체계 구축을 위해 투자유치실 신설과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담하는 전략기동대인 ‘두발로본부’를 신설·운영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히 바라는 창조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 인력 등을 적재적소에 지원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파산하지 않고 돈 잘 버는 경북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조비타민 프로젝트’가 추진될 계획이다.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경북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북을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안전정책관·‘강산해 특수구조단’을 신설하고 동해안 119특수구조단과 낙동강 수난구조대를 설치하여 원자력과 테러, 해양, 산악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교육체험관(상시훈련)을 건립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 산촌, 어촌의 내고향 3촌 희망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끌벅적 고향장터 만들기’는 도시민들의 고향 사랑 마음을 되살리고, 농어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나눔을

함께 해나가겠다는 공감 정책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클린 5일장 육성과 함께 주차장, 편의시설,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문화복지 사다리’는 도민에게 직접 다가가기 위해 인프라, 하드웨어형 문화관광 사업에서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개별형 소프트웨어 문화예술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고택음악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작은 영화관, 작은 도서관, 어르신 풍류방과 예술복덕방 등 주민 밀착형 문화제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세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 복지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다.

또 경북형 문화융성으로 경북의 혼을 깨워 3대 문화권의 문화·자연으로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정신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효 복지 3대 약속(치매극복프로그램, 공동홈 운영, 행복경로당 운영)을 실현하여 핵가족화와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할매·할배의 날 제정 등 경북에 살면 사람 대접 받고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복지를 실현하여 가족애를 되살리고 어른을 섬기는 경북형 생활공감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생활권발전협의회



독도만세삼창

도청신도시 조성으로 대한민국 황금허리 경제권의 중심으로 부상

400년 도읍지를 옮기는 신도청 이전사업이 껌걸음을 걷고 있다. 도청신청사는 올 10월에 완공되어 11월 도청이전추진본부 등 청사관리 운영부서 50여 명이 우선 이전하고 신청사 시운전과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정주여건이 조성되는 내년 7월부터 3개월간 이전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신도시는 2027년까지 인구 10만 도시 조성을 목표로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한다.

또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도청이전 신도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동서 4축 고속도로와 동서 5축 고속도로, 중앙선 복선전철화가 완성되면 전국 어디서나 광역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북부권 산업발전과 인구증가에 획기적인 모티브가 되어 북부권 미래 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경북을 수도권과 남부권에 대등하게 맞서는 대한민국 황금허리 경제권의 중심으로 부상시킬 것이다.

도청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다. 도읍을 옮기는 정신의 문제다. 경북의 행정과 문화, 역사와 혼이 옮겨가는 대역사다. ‘화랑·선비·호국·새마을’ 정신을 4대 축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신도청시대를 맞아 경북의 자존과 영광을 회복해 경북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새로운 경북시대의 새 터전이 곧 빛나는 모습으로 확인될 것이다. 🌟



도청신도시조경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판사, 국회의원의 관록을 바탕으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민선 6기 4년 동안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의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게 될 김기현 시장은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만들기를 시정목표로 삼고 소통과 섬김의 자세로 새로운 '울산호'를 출발시켰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산업수도 울산이 지방도시를 넘어 우리나라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중앙과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울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면서 창조와 품격, 희망이 살아있는 울산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민선 6기 울산의 시정방향

울산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해양산업을 주력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명실상부한 산업수도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기존 산업의 성장 한계와 패러다임 변화로 울산은 많은 도전과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제 새로운 창조경제의 시대를 맞아 창의와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창조시대로의 도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기현 울산시장은 민선 6기 울산의 새로운 시정방향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으로 정하였다. 7대 비전과 40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울산의 무대를 중앙과 세계로 넓혀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창조'와 '품격'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창조도시 울산'이다. 앞으로 100년 울산의 발전과 풍요를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 및 먹거리를 찾는 것이 최대 중요 현안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주력산업과 IT·BT·NT 등 첨단산업과의 융·복합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전지산업 등을 비롯한 창조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창조경제의 중심이 될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기반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물류, 금융 등 소프트웨어적 콘텐츠를 내실 있게 채워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울산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관광과 산악·해양관광을 패키지화하여 울산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부가가치가 높은 제4의 창조경제 영역으로 자리 매김할 계획이다.

두 번째, '품격 있고 따뜻한 울산'이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충만하고, 소득지수 1위 도시역량에 맞는 행복지수 1위 도시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경제지수를 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복지·문화·교육·각종 도시인프라 등도 명품도시에 걸 맞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김기현 시장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안전제일 으뜸 울산 만들기에 역점을 두었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원전이 밀집한 울산의 지역적 여건에 맞는 재난예방 및 대응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UN 방재안전도시 인증 추진, 종합소방훈련장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S-Oil 중류탑 폐열활용 발전시설 기공식

“
키워드는 '창조'와 '품격'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중심이 될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간소한 취임식



시민과의 대화

또한 건강한 희망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나눔과 배려가 조화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베이비붐 세대 등 퇴직 인력 대책과 함께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투자는 물론 품격 있는 문화행복도시를 위해 실내종합체육관, 어린이 테마파크, 시민·청소년 문화회관,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여기에 도로망 확충, 교통체계 개선, 지능형 교통시스템 확대, 역세권 개발 및 복합환승시스템 구축, 특성화 복합타운 조성 등 생활에 편리한 최적의 도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창조경제와 안전, 문화·교육·복지, 일자리 창출과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품격 있는 도시 울산은 물론 인구 200만의 중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2014년 울산의 시정방향

민선 6기의 울산 시정방향인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먹거리를 찾아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창조산업 아이템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창조경제정책관'과 안전제일 으뜸 울산을 위한 '안전정책관'을 설치하고, 근로자 도시인 울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화와 소통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해 나갈 '노동특보'도 신설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민선 6기 공약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지역 현안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지속적 추진, 산업도시 위상에 걸맞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 등 대형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오랜 현안문제인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맑은 물 공급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으로 실마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선 6기를 시작하는 2014년 하반기는 새로운 울산의 출발점으로 삼고 대화와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은 물론 현장행정 강화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정을 이끌어 창조적인 울



급식봉사

산 발전의 디딤돌을 놓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제언

1995년 민선 1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거의 20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미흡한 점도 많다. 제일 먼저 지방재정의 문제이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 정도인데 지방정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6:4 정도로 개편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5:5 내지는 5.5:4.5 정도이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예속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비용은 가능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고 지방에 부담을 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권한의 지방이양이다. 중앙정부가 아직도 지방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통제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도시계획이나 환경정비, 문화재 관리, 토지이용 등에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을 믿고 이러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주기를 중앙정부에 바란다. 지방정부는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경험을 축적해 왔고, 이제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정책의 최종 집행자이자 국정 운영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지방의 행·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뿐만 아니라 지방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조속히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광역단체간의 갈등과 문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와 협력, 대화와 타협이 절실히 요구된다. ☘



경남미래 50년의 행복한 약속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1기 도정에서 척당불기(倜儻不羈)의 정신으로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졌다면, 2기 도정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도정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정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위해 도정비전을 지난 1기 도정비전과 같은 '당당한 경남시대'로 설정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한 경남, 깨끗한 경남, 행복한 경남, 서부 대개발, 경남미래 50년' 등 5대 도정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경남

재난과 위험에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 분야에 예산 및 인력을 우선 배정하여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먼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대응을 일원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든타임에 최적화된 초기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에 대한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아동·여성 폭력근절 및 현장 맞춤형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를 2018년까지 전 시·군에 마무리하여 생활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깨끗한 경남

경남이 먼저 시작하여 완성하는, 경남發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난 7월 '혁신추진 TF'를 구성하였다. 경남發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9월 중에는 경남혁신도정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국가 개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發 혁신이란 행정내부 혁신과 민간부분 혁신을 통한 국가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독립대학, 경발연 등 도 산하기관 구조혁신을 통한 내부혁신은 물론 민간단체 주도의 혁신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부분 혁신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청렴 풍토조성을 위한 내부시스템인 청백 e-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 암행어사 운영 확대 등을 통한 외부 감시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민을 지키는 규제는 더 살피고 부패의 원인이 되는 규제는 혁파하여 부패의 악습을 끊고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깨끗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산청의약엑스포

“
골든타임에 최적화된
초기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해양플랜트



일자리 창출

행복한 경남

문화와 복지, 환경이 어우러진 경남,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남을 만들어 가고 있다. 도내 대학생 취업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대학생 취업 확대 협약과 맞춤형 트랙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지 않도록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육아부담으로 힘든 여성, 편견과 차별로 좌절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주변의 어려운 곳부터 꼼꼼히 살필 계획이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이지만 기초연금 실시, 의료급여 지원 확대 등 서민복지를 위해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입하여 서민체감형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푸른 경남'을 만들고, 품격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행복한 경남'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획기적인 서부 대개발 추진

서부지역은 경남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22% 수준에 불과하며 GRDP(지역 총생산)는 17%대에 머물러 있어 서부경남의 GRDP를 경남 전체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려 경남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의 도청 서부청사를 조기에 개청하는 한편, 경남 산하 일부 공공기관도 서부권으로

이전하여 서부 대개발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에는 서부청사추진단, 항공우주 산업과를 신설, 서부권개발본부로 전진 배치하여 서부권 지역의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서부권 대개발을 선도할 핵심산업도 중점 육성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산업이면서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큰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7일 사천지역을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정되어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창·함양·산청을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는 한방 항노화 산업도 중점 육성 중에 있으며, 남부내륙고속철도와 함양~울산간 고속국도를 조기에 완공하여 서부경남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추진

지난 1년 반, 경남의 새로운 미래 50년 밑그림을 완성하였다면, 다음 4년은 모두가 행복한 경남미래 50년을 완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가 지원하기로 한 3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부권에는 사천·진주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동부지역에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남부지역에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혁신산단으로 조성하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기계융합산업 구조고도화를 견인할 것이다. 또한 산청·함양·거창 중심의 한방 항노화 산업과 양산 중심의 양방 항노화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남해·하동 미세조류 생산단지 및 센터 건립을 통해 해양 항노화 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내 약 285만㎡ 규모에 테마파크, 영화관, 프리미엄 아울렛, 6성급 호텔 등이 들어서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순항 중에 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FOX사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7월에는 서울에서 FOX사, 빌리지 로드쇼와 3자 MOU를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방안으로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경남은 올 연말까지 정부의 복합리조트 종합계획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반영시키고, 내년 상반기까지 테마파크 개발사업자를 발굴하여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남 도민에게 약속드린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남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려 더 큰 경남, 더 강한 경남,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행복한 경남을 위해 민선6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항공산업

글로벌테마파크



“
우리 젊은이들이
일 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지 않도록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
”

행정수도 세종시, 아주 특별한 도시가 되기 위한 걸음을 내딛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故 노무현 대통령과 500만 충청인의 꿈과 소망이 담긴 도시이자 참여정부가 남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상징이다. 또한 실질적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갈 선도자의 역할도 하는 도시이다. 600여 년 전 조선이 건국되면서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이후, 가장 커다란 의미가 담긴 도시가 세종시라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세종시신형사 건립공사 현장 점검

세종시가 특별한 이유는 '세종'이라는 이름에 그 뜻이 담겨 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스스로 한글을 창제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발전에 심혈을 기울였고 문화와 교육이 융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이러한 노력은 조선을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변모시켰고 우리 민족사의 가장 빛나는 시대로 이끌었다. 세종대왕의 칭호를 물려받은 세종시는 세종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고 숭고한 이름에 걸맞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세종시의 참모습이 만방에 들어서는 순간 세종시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 나머지 중앙부처가 하루 빨리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치와 행정기능이 분리된 현재의 비효율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
‘행복도시 세종’은
시민의 뜻과
소망을 담아
개발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이다.
”



정부세종청사

행복도시 세종

‘행복도시 세종’은 시민의 뜻과 소망을 담아 개발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고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빠른 속도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며 성장해 나가는 도시이니만큼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다. 따뜻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득·주거·돌봄·교육·건강의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한 ‘세종형 복지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는 천년 고도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문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조상의 얼이 담긴 다양한 문화재를 소중히 보존하고,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곳곳의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권역 별로 개발·지원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대 문화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2기 시정부 인수위원회인 시민참여위원회가 정한 12개 시정목표 중 ‘인구 10만 청춘 조치원’과 ‘도농 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사업은 세종시의 정체성을 만들고 시민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중심축인 남부권과 더불어 발전하는 북부권을 만들기 위해서 세종시의 모태도시인 조치원을 인구 10만의 경제중심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도농상생 사업임과 동시에 세종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민연대운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과제인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는 죄 없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어린 생명들을 위한 우리 어른들의 속죄와 반성을 담은 과제로써 2018년까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국제안전도시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조상의 얼이 담긴 다양한 문화재를 소중히 보존하고,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

이들 12개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민의 참여이다. 시민 스스로 도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다양한 분야의 시정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함께 즐겁게 잘 사는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12대 시정목표

- | | |
|---------------------|---------------------|
| 01
실질적 행정수도 | 07
세종형 3농혁신 |
| 02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 08
도농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
| 03
인구 10만 청춘 조치원 | 09
대한민국 10대 문화도시 |
| 04
조화로운 균형발전 | 10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
| 05
지속가능한 좋은 경제 | 11
시민주도 주민자치 |
| 06
따뜻한 복지와 안정된 삶 | 12
능률행정·좋은 시정 |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제2기 시정부가 끝날 즈음에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틀을 확립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도농상생의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 🌟

고북호수공원



스마트교육(한솔초)

세종호수공원



대전광역시, 대전시민대학 평생학습으로 행복해지는 힘을 기르다

대전시민대학은 모든 시민들에게 열린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을 통해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구 충남도청사를 리모델링한 후 개교하였다. 대전시민대학은 일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배움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시민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한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대전시민대학
유아부터 노인층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교양강좌부터 자격증 대비반까지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운영 중이다.



교육시설과 운영조직 완비
다양한 강좌와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전시민대학 4개 동에 30개의 강의실과 40개의 실습실을 마련하였다. 교육 성과를 발표하고 교육생이 서로 소통하며 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한 열린 공간인 공연장, 전시갤러리, 컨퍼런스 홀을 완비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족도서관, 영유아 보육실 등도 마련하여 육아 중인 여성도 육아의 부담을 덜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복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전시민대학의 노력이다. 또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시민대학운영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시민대학 지원관리팀 3명, 학사운영팀 22명, 총 25명의 전담 직원을 배치하였으며, 매 학기마다 700여 명의 전문 강사들을 위촉해 대한민국 최고의 시민대학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경력 단절여성의 사회 복귀 가속화 등으로 자아실현은 물론 자격증이나 취업을 위한 재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프로그램들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대전시민대학도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영유아부터 노인층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교양강좌부터 자격증 대비반까지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운영 중이다.

대전시민대학은 연 중 4학기제로 운영된다. 1학기는 3~6월, 여름학기는 7~8월, 2학기는 9~12월, 겨울학기는 1~2월로 총 46주간이다. 매 학기 별 13개 분야의 프로그램, 1,000여 개의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인문학 살롱, 인문고전 특강, 북포럼, 인문학의 향기 등 90여 개의 강좌가 정규과정으로 운영되면서 인기를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강사진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수강신청 경쟁이
치열하다



끌고 있다. 또한 성악, 바이올린, 첼로 등 음악은 물론 회화, 사진, 영상, 공예 등 다양한 취미·교양 강좌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 교육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강사진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수강신청 경쟁이 치열하다.

프로그램별 강좌

프로그램 분야	개설 강좌
인문학 아카데미	고전문학, 한국의 시인들, 독서와 소통, 소설 읽기와 쓰기, 찬란한 유산 우리 문화재, 한자 공인 급수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논어, 명심보감 등
세상의 모든 언어 아카데미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독일어, 히브리어, 터키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심리·리더십 아카데미	성격유형(MBT)에 따른 나의 가치탐험 여행, 에니어그램과 심리를 활용한 대인관계기법, '중년' 나를 만나는 여행, 버추 힐링, 심리상담사 등
요리 아카데미	전통주 빚기, 김치 담그기, 발효효소이야기, 사찰요리, 채식요리, 밑반찬 만들기, 이유식과 죽, 샌드위치&샐러드, 라떼아트, 바리스타, 힐링푸드 등
건강·스포츠 아카데미	한방 식생활, 약초이야기, 다이어트, 사상의학, 수지침, 아로마테라피, 요가, 필라테스, 국산도, 펜싱, 레크레이션, 장애우 체육교실 등
음악 아카데미	성악, 호흡과 발성법, 우리가곡 부르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 작곡, 가야금, 해금, 민요, 판소리, 기타, 드럼 등
공예·미술 아카데미	도예, 전각, 금속공예, 동판공예, 나무공예, 한지공예, 전통매듭, 목공, 프랑스 자수, 옷 만들기, 북아트, 드로잉, 유화, 캐리커처, 서예 등
공연예술 아카데미	춘앵전 궁중무용, 이매방류 승무, 진도북춤 배우기, 하와이 훌라 민속춤 등
사진영상예술 아카데미	카메라 기초, 포토 에세이, 사진예술론, 풍경사진찍기, 디카로 즐기기 등
직업교육 아카데미	창업스쿨링, 쇼핑몰 창업하기, 베이비시터, 가베 전문가, 책놀이 지도사, 교육연구 지도사,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 평생교육사 등
공동체 아카데미	수화, 점자, 양성평등, 보드게임, 손발마사지, 도시농업, 생태환경 탐사 등
경제경영 아카데미	생활경제와 경제학, 재무제표 분석 실무, 하버드 경영학 논문을 통해 본 미국의 사업이야기, 주식투자 이론·실전, 부동산 경공매 등
과학 컴퓨터 아카데미	컴퓨터 기초, 엑셀, 포토샵, 일러스트, UCC 만들기, 블로그 만들기, 통계분석 기초, 스마트폰 활용법, 플래시, 팟캐스트 제작 등
유아 클래스	레고교실, 유아 발레, 유아셈 주산놀이, 세계요리 탐방, 미술여행 등
어린이 클래스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 발레, 피아노, 풍물놀이, 드럼, 미술,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 한자, 스피치 교실, 창의과학, 펜싱 등
청소년 클래스	바이올린, 트럼본, 트럼펫, 가야금, 난타, K-POP 댄스, 조리입문과정, 몸짱, 영어, 인문고전, 한국사 능력검정, 피아노 실용반주 등
가족 클래스	도자기 체험, 붓글씨, 파티요리, 빵 만들기, 애니메이션 속 문학여행 등
1일 특선	사춘기 아이와 소통기법, 한의학 특강, 직업세계여행, 천연과일잼 등

2014년 9월부터는 지역공동체 인적자본 향상을 위해 '대전시민 1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로 가죽공예, 유리공예, 한지공예 등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형과 책놀이 지도사, 교육연구지도사, 심리상담사 2급, 미술심리상담사 2급 등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지도사형 등 17개의 자격증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민대학 1년, 짧지만 큰 성과

그 동안 국내 평생학습시스템은 주로 소량의 한정된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참여층도 일부 주부들과 노년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전 시민대학은 3세부터 80대까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를 구성했으며, 지난 일년 4학기 동안 1,200여 개의 강좌에 53,913명이 수강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대전시민대학의 또 다른 성과로 성악에 관심을 갖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학생은 취미로 매주 대전시민대학에서 성악 강의를 수강하며 관심을 키웠고 지도하던 시민대학 강사의 권유로 대전예고에 지원해 수석합격이라는 결실을 얻었다. 이와 더불어 대전 곳곳에서 모인 3세부터 80세까지의 시민들이 세대와 계층을 넘어 한 클래스에서 동료로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하게 강의를 듣는 모습은 대전시민공동체의 밑거름 형성이라는 성과로 다가왔다.

한편, 지난 2013년 10월, 시민대학 및 원도심 일원에서 '행복을 만드는 평생학습'이란 주제로 평생학습 축제가 개최됐다. 각종 평생학습 체험, 작품전시, 경연대회, 세미나는 물론 평생학습 사진 공모전, 교수들이 꾸미는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또한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2013 브레인 쟁! 챔피언십', '충청도 사투리 경연대회', '실버 한글 받아쓰기 골든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 축제를 즐겼다. 이 외에도 평생교육 세미나와 포럼, 토론회 등은 물론 북 콘서트, 대전의 재발견 등 보다 더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을 소개하는 행사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알렸다.

향후 운영 방향

대전시민대학은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대학 홈페이지 '프로그램 요청(학습자)', '프로그램 제안(교수)', '묻고 답하기'란을 통해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의견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설함은 물론 꼭 필요한 강의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있다. 이는 강좌와 연계된 커뮤니티 모임을 활성화하여 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대전시민대학의 노력이다. 또한 대전시민대학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의 전 단계에 걸쳐서 계속되는 교육과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전체로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교육 원리를 기본으로 평생교육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다. 🍎



전라북도, ‘삼락농정’으로 농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다

전라북도가 ‘사람 찾는 농촌, 제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을 실현하기 위해 ‘삼락농정(三樂農政)’을 추진한다. ‘삼락농정’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과소화마을 증가, 농가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꺼내든 전북농업의 미래 창조 아젠다이다. (*과소화 마을 : 20호 미만 마을)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 6기 전북 도정의 제일 키워드는 농업”이라며 “전통농업을 과학화하고 식품산업 등과 융합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 농촌에서 행복 찾는 전라북도

전라북도(이하 전북)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장 호평받는 장소로 꼽히고 있다. 단순히 농사와 농업이 존재하는 촌이 아닌 철학과 생명, 문화가 있는 다양한 길이 있는, 그야말로 삶을 설계하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을 찾는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북을 더 많은 도시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더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열린 귀농귀촌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북으로 귀농귀촌한 세대는 2,993세대, 총 5,469명이 전북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그 중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50대 이하의 유입 비중이 75.6%에 달하면서 농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더 많은 도시민들이 전북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공간과 일자리(소득), 지원사업 등과 관련된 정보를 원스톱(one-stop) 제공하는 ‘전라북도 귀농귀촌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북지역 13개 시·군의 거주공간과 일자리, 지원사업, 재배작물, 귀농귀촌교육정보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로써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농식품 인력개발원에서는 귀농귀촌 교육(10기, 240명)도 실시해 전북이 귀농귀촌의 최적지임을 부각시켜, '14년에는 4,000세대의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북은 귀농귀촌인 확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귀농귀촌 관련 상담·알선·교육·홍보 등 종합안내와 더불어 홈페이지(www.jbreturn.com) 및 상담전화(☎1577-3742)를 통해 연중 귀농귀촌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귀농귀촌 희망 1순위, 전북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실습 및 현장 교육지원 등’ 귀농귀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전북은 ‘전라북도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와 귀농귀촌의 모든 것을 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영 등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관심과 발걸음을 모을 예정이다.

농촌유학 - 마을과 학교가 아이들로 북적이다

2009년 전교생 16명, 입학생 0명으로 폐교 위기에 있던 임실 대리초등학교는 농촌유학을 통해 2014년 현재 재학생이 109명으로 늘었다. 도시에서 전학온 아이들로 적막했던 농촌 학교와 마을에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다.



귀농귀촌

단순히 농사와 농업이 존재하는 촌이 아닌 철학과 생명, 문화가 있는 다양한 길이 있는, 그야말로 삶을 설계하는 열린 공간

도시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는
‘농촌유학’

도시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는 ‘농촌유학’, 현재 전북에는 전국 농촌유학 실행지 40개소 중 16개소가 위치할 정도로 농촌유학이 활성화돼 있다. 이로부터 아이들이 다니고 싶게끔 정감 있게 지었다. 예를 들어, 산적 소굴 산촌유학·고모샘네 산촌유학(이상 정읍), 철딱서니학교(장수),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덕치유학센터(이상 임실), 온몸 농촌유학(고창) 등이다.

농촌유학은 지역에 있는 정규 초·중·고에 다니기 때문에 대안학교와 구별되며, 지역의 농촌유학센터나 현지 농가에서 생활하며 직접 농촌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만족도가 높다.

전북은 2012년 자치단체 최초로 ‘농촌유학 1번지’를 선포하고 같은 해 12월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조례’를 제정, 농촌유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꾸준히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또한 전국단위 농촌유학 페스티벌을 유치하는가 하면 수도권 농촌유학 홍보관 운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농촌유학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전북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전북의 농촌유학 단기체험캠프를 제안, 2012년부터 연속 3년간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농촌유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정읍 칠보지역에 학생과 부모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농촌유학 임시숙소를 준공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농촌유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작년부터 연간 100여 명씩 농촌유학 활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해 농촌유학의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전북은 2018년까지 농촌유학센터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농촌유학 협력학교를 공식 지정하고,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해 농촌유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로컬푸드 - 농산물 직거래 롤모델로 전국 확산

전북은 2012년부터 기존 대규모 유통채널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로컬푸드는 한마디로 생산자 농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新유통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중·소농, 고령농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조직화로 새로운 직거래 방식의 ‘전북형 로컬푸드’가 자리를 잡고, 농산물 직거래의 롤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전북은 동김제농협 등 도내 15개소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연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익산시, 남원원협이 추가로 개장에 예정이다. 전북은 로컬푸드 농산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중소농가 조직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작목반 350개소를 육성하



농촌유학

지원을 통해
생산자-소비자 관계형 시장인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로컬푸드인증현판식

고,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을 통해 생산자-소비자 관계형 시장인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에서는 로컬푸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로컬푸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 시행, 소비자 모니터단 운영 등 직매장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신뢰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6차산업 -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다

전북은 2010년부터 새로운 농업혁신 모델로 농식품 6차산업화를 핵심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전국 최초의 농가주도형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을 시행해 왔다.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은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가공·체험과 연계해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차별화된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2012년 정읍, 김제, 완주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7개소에 총 211억 원을 투자, 농가조직화, 컨설팅,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과 가공 시설, 직판장, 농가레스토랑, 체험시설 등 하드웨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20개 법인, 77개 작목반, 3,300여 농가가 참여, 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수익창출 및 이익환원이 가능한 생산농가 주도형 6차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김제 로컬랜드의 경우 2014년도에만 2억 3천여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민선 6기 전라북도의 비전은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이다. 전북은 전북이 간직한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과 청정한 생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모습과 가치를 담아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속의 한국’을 구현하고 21세기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한다. 그 중심에 오천년 농도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삼락농정’이 있다. ●



로컬푸드 직판장

인천광역시, 잠자는 행정정보를 손안에 보물지도로! '행정정보 클라우드 GIS 포털 서비스'

인천광역시는 2012년 한 해 동안 2,597,000여 건의 전자문서와 19,000여 건의 메모보고, 28,000여 권의 非 전자정보가 생산되었으며 최종 결과물을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기초정보들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문서관리 및 보관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용된 문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휴지조각처럼 버려지거나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책상 속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주요 정보들이나 일반 행정정보를 마우스 드래그 한 번으로 정리 저장형 지도로 만들 수 있는 클라우드 GIS 플랫폼을 도입했다.



클라우드 GIS 포털 서비스

추진배경

1998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전자결재 체계와 2002년 11월 13일 전자정부가 출범 그리고 급속한 IT 기술의 발달로 방대한 행정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범위가 확산하는 등 행정의 혁신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종 결과물만 공식문서로 보관되고 최종 결과물을 위해 필요했던 다양한 기초정보나 흔히 '엑기스'라고 이야기하는 주요 정보들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나면 문서 세단기에 들어가거나 담당자 책상 서랍이나 컴퓨터, USB 등 임시저장장치에 보관되어 한동안 요긴하게 잘 써먹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요긴하게 활용하던 정보들도 냉장고 속 야채처럼 새로운 싱싱한 야채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혹시 이사라도 가게 되면 공간도 부족하고 무게도 만만치 않아 결국 냉장고를 정리해야 하고 오래된 야채들은 결국 쓰레기통에 들어가 기 마련이다.

예전부터 사회는 복잡하였겠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복잡한 실타래들이 세상 밖으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와 많은 사람 눈에 쉽게 띄게 되면서 공무원들은 의사결정에 더 신중하게 되고 더 명확하고 확신에 찬 의사결정을 위해 공식적인 통계를 찾아보고 관계 부서에 문서를 보내 확인을 요청하는가 하면 포털을 검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어렵게 찾은 통계는 텍스트 형태라 분석이 쉽지 않고 관계부서는 공식적인 답변 이외에는 토시 하나 더 달아주지 않으며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포털 정보는 참고자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도관련 불안사례

불안사례 1

공무원들은 많은 정보를 이용하지만 결과 값, 즉 공식적인 자료들만 공개·공유할 뿐 정작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기초정보는 PC나 서랍 속에 보관하다 인사발령 나면 가지고 가든가 삭제하든가 저장할 공간은 넉넉히 않고 또 공식적인 서류만 후임자에게 넘겨주게 되니 어렵게 확보한 아까운 정보들이 휴지통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고 지도는 너무 어려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항상 전문가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골치 아픈 자료다.

불안사례 2

국민들은 옛말에 "집 안에 면서기 한 명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언가 중요한 정보는 공무원들만 알고 이용하는 정보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 들어 많은 정보가 공개·개방되지만, 텍스트 형태의 정보들은 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나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겨지며 정보의 홍수 속에 "빛 좋은 개살구"다.

1998년부터 추진한 전자결재 체계 덕분에 대부분의 문서가 전산화되면서 사무실마다 넘쳐나던 캐비닛은 조금씩 줄어들고 기관마다 보유한 문서고는 여유를 조금 찾아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모바일의 발달로 일상은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했다. 차에 오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비게이션을 찾고 하루에도 수십 번 포털지도로 검색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가 하면 지하철 맵, 버스 맵이 손을 떠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젠 우리 일상에 지도가 들어와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정





텍스트 형태의 일반 행정정보를 마우스 드래그 한 번으로 지도로 만들 수 있는 클라우드 GIS 플랫폼을 도입했다.

보가 지도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에 지도가 들어와 있는가? 행정정보 가 지도에 들어가 있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는 대부분 정보들이 전자적 문서로 저장되고 있으며 이 정보들의 80% 이상이 위치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하나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지도로 보여줄 수가 없어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행정은 불편하며 이것이 일상과 행정의 괴리이다. 또한, 텍스트 형태의 정보는 물론, 동영상, 소리, 사진 정보 등도 이제 전자문서로써 관리하게 되면서 사이버 문서고 또한 넘쳐나게 될 지경이다. 이렇게 매일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고 하나 실제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정보 중에 30% 이상 저장될까? 서버에 저장되지 않은 정보는 각자의 컴퓨터 또는 USB 등에 저장되어 개인의 역량으로 남는다. 그 역량을 공유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한계이자 공유·공개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개요

(1) 접근방법

포털 등 민간에서 위치정보를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지속해서 많은 투자를 하여 우리 일상에 지도가 들어와 많은 분야에서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이제 행정의 편리를 위해 방대한 행정정보의 지도서비스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위치정보와 관련 있는 전자적 문서는 물론 자칫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쉬운 공무원들의 책상 속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주요 정보들을 지도 위에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누구나 쉽게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텍스트 형태의 일반 행정정보를 마우스 드래그 한 번으로 지도로 만들 수 있는 클라우드 GIS 플랫폼을 도입했다.

클라우드 GIS 플랫폼을 이용해 방대한 공공정보를 지도로 시각화하고 시각화된 지도 정보를 기반으로 개방과 공유, 협업을 통해 부서 벽 허물기는 물론, 지금까지 텍스트 형태로만 시민에게 제공되던 유용한 정보들을 위치 찾기가 쉽고 분석과 활용이 쉽도록 포털 등 다양한 지도 위에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혁신이 가능한 최신 기술과 지도서비스를 구현하게 된 것이다.

(2) 주요장애 및 극복

많은 사람이 “지도는 네이버나 다음 지도 보면 되지.” 라는 의문을 달았다. 일면 맞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민간지도서비스는 그 정보를 수집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며 매우 제한적이고 상업적이며 공공정보에 비하면 빙산에 일각이라는 점을 들어 다양한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었고 2009년 네이버, 2013년 다음과 체결한 지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각자가 구축한 지도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어 Data나 서비스의 중복성을 피해 나갈 수 있었다. 공무원들은 아직 기존의 고전적인 업무방식을 크게 탈피하지 못했다. 클라우드 GIS는 지도 전문가만 활용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라는 편견에서부터 지도가 필요하면 항상 커다란 종이에 출력해 주길 원했고 그 위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 하길 원했다. 공무원 개개인의 책상과 컴퓨터 속에 꼭꼭 숨겨놓은 주요정보는 아직도 개인별, 업무별,

부서별 칸막이가 여전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먼저, 2017년까지 일반 행 정보의 80% 이상 지도서비스를 목표로 “시민에게는 투명한 인천! 쉽고 편리한 정보”를 알리고 공무원들에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5대 핵심과제 +1을 선정하고 5대 핵심과제 실무 담당자와 직접면담을 통해 사업설명과 정보의 생성·활용·관리체계를 분석하는 한편, 자료의 활용 주체 간 공유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였으며, 특히 +1과제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도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한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성과 및 향후 계획

2013. 5월 클라우드 GIS 포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번, 도로명 주소, 인문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체계를 갖추고 일반 사용자들이 우리 시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물론, 국가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지도(Vword), 네이버, 다음의 지도 위에 자신의 정보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공유지 재산임대료 변상금 체납지도, 비오톱지도, 개별공시지가 현황도, 도로점용료 누락분 약 82억 원 추정 세원 발굴, 지방선거 선거구 지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보관지도(20만 건, 630억 원)를 세정과의 협업하여 구축하는 등 통계 산출이 가능한 지난 5월 6일부터 현재까지 3개월간 지도제작 건수가 304개가 넘는 등 활용 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위치정보 기반, 스마트 경기운영 지원과 관람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2014. 7. 15일 2014 인천AG·APG 전용 클라우드 GIS 포털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다. 아시안게임 지원 지도서비스는 다양한 현황분석 지도를 이용한 종합상황 지도와 안전, 교통, 관광, 축제 등 아시안게임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지도를 서비스한다.

향후 계획으로는 5대 핵심과제 실무부서(市 18개 부서 區 8개 부서 등 28개 부서) 면담결과에 따라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지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도,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도, 인천 미래가치를 알리는 지도, 정부 3.0 가치 실현이 가능한 협업지도 등에 대한 사업범위를 전부서와 사업소, 모든 郡·區로 확대하고 2014. 8월부터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 전용 클라우드 GIS 포털에 성화 봉송으로 서비스를 시작으로 세계지도기반 메달집계, 교통종합대책모니터링, 안전 사고 모니터링지도와 북한선수단 경기 및 응원단 지도를 PC, 태블릿,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며,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 편리한 관람과 안전한 경기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에게는 투명한 인천! 쉽고 편리한 정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광주

의 미인미각과 함께 떠나는
가을 여행

문화(美), 사람(人), 맛(味), 축제(樂)는 여행지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섭섭할 정도로 이 네 가지의 조합은 여행자의 마음과 발걸음을 사로 잡는다.
이번 가을엔 문화와 예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심장부 광주로 눈을 돌려보자.
그곳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광주만의 미인미각이 숨겨져 있다.



美,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맛을 찾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교류와 창작,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지는 문화중심도시의 핵심시설로서 아시아 문화의 역동적 에너지를 만들고 발산하는 문화발전소이다. 2008년 전당건립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10월 준공예정이다. 극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어린이문화공간 등의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아시아문화의 교류와 창조의 장이 되어 아시아문화의 무한한 가치를 발굴하고 꽃피울 것으로 기대된다.

▶ 2014년 10월 준공, 2015년 7월 개관 예정

문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062-230-0146)
홈페이지 <http://www.asiaculturecity.com>

● 광주비엔날레

광주의 자랑 광주비엔날레. 이 국제현대미술제는 지난 1995년, 광복 50주년과 '미술의 해'를 기념하고 한국 미술문화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한편, 광주 민주정신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창설되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이번 비엔날레는 '터전을 불태우라'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문화도시, 민주도시 광주가 문화발신지가 되어 한국-아시아-세계와 교류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기간 2014. 9. 5 ~ 11. 9
문의 (재)광주비엔날레(062-608-4114)
홈페이지 <http://www.gb.or.kr>

● 광주폴리

광주폴리는 파빌리온의 공간과 가로시설물의 공공기능, 장식적 역할을 아우르며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도시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시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이 건축물들은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문화적 에너지는 물론 문화예술도시 광주의 품격을 더해주고 있다. 폴리투어를 통해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을 둘러보며 잊혀진 광주의 역사를 마주하고, 공공공간이 가진 잠재력을 만나보자.

투어신청 광주폴리 웹사이트에서 신청
작품해설 폴리도스트 운영(062-608-4261~7)
홈페이지 <http://www.gwangjuolly.org>

● 무등산

광주도심에서 차로 불과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무등산은 4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특히 은빛물결 일렁이는 억새밭의 가을풍경은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담양과 맞닿은 무등산자락 평촌마을은 수달과 반딧불이의 서식지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9월이면 반딧불이를 마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문의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062-227-1187)
홈페이지 <http://mudeung.knps.or.kr>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광주 비엔날레



광주폴리



무등산 억새밭



국립5.18
민주묘지



양림동역사
문화마을



광주
한정식



무등산
보리밥



광주
김치



人, 인권도시 광주에서 사람의 가치를 보다

● 오월길

오월길은 1980년 5월의 뜨거웠던 현장을 걸으면서 오월의 역사, 광주의 역사, 사람의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걷기코스이다. 오월길을 걷다 보면 살아 있는 광주의 역사와 현재를 체험하고 미래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만나게 된다.

문의 오월길 방문자센터(062-225-0518)
홈페이지 <http://518road.518.org>

●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은 1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곳으로 광주 최초로 서양의 근대문물을 받아들인 창구로 광주 근대정신의 발현지이다. 양림 오거리를 사이에 두고, 서양문화와 전통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전통가옥과 서양건축물이 마주하는 독특한 풍경 속에서 기독교 문화와 예술이 꽃을 피웠다. 또한 광주 근대화의 서막을 알리며 사회변혁에 앞장섰던 인물들의 정신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 양림동 근대역사 문화탐방 프로그램 신청(사전예약)
문의 남구청 교육지원과(062-607-2432)
홈페이지 광주 근대역사 문화해설사 카페 : <http://cafe.daum.net/gwangju.citynamgu>

味, 풍요와 정이 넘치는 남도의 맛을 보다

● 광주한정식

남도의 맛과 멋, 여유 있는 인심을 집약해 놓은 상차림으로 산과 들, 바다에서 나는 모든 먹거리가 한데 모여 있다. 특히 남도 한정식의 핵심인 10가지가 넘는 젓갈의 깊은 맛을 음미해 볼 수 있다.

● 무등산 보리밥

계절에 따라 바뀌는 채소와 신선한 나물에 얼큰한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싹싹 비벼먹는 보리밥은 무등산 등반 후 시원한 동동주와 함께 하면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푸짐하다.

▶ 무등산 보리밥 거리 동구 동계로(지산동) 일대

● 광주김치

소금간을 넉넉히 하고 젓갈과 고춧가루 등 각종 양념을 듬뿍 넣어 그 맛이 깊고 매콤한 것이 광주김치의 특징이다. 특히 세계김치문화축제는 광주김치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김치산업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광주김치타운에서는 김치 담그기를 직접 체험하고, 김치를 구입할 수도 있다.

▶ 광주김치타운 남구 김치로 60(매주 월요일 휴관)

● 광주오리탕

광주역 근처 유동에는 유명한 '오리탕거리'가 있다. 광주오리탕은 오리와 들깨가루, 신선한 미나리를 듬뿍 넣어 맛이 개운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며 보양식으로 으뜸이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별미이다.

▶ 유동 오리의 거리 북구 경양로(유동) 일대

● 송정떡갈비

광산구청 앞에 가면 여기저기 떡갈비 간판이 즐비하다. 떡갈비 거리가 들어선 것은 30여 년 전. 인절미 떡처럼 네모지게 만든 떡갈비는 술안주 겸 별미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갈비살에 여러 부위의 고기 살을 섞어 푸짐하게 다진 다음 마늘, 생강, 참기름 등으로 만든 갖은 양념을 발라 구워낸 떡갈비의 구수한 냄새는 지나가는 이의 발길을 절로 멈추게 한다.

▶ 송정 향토떡갈비 거리 광산구 고내상길(송정동)

樂, 또한 즐겁고 기쁘지 아니한가?

●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는 외국인에게는 김치의 우수성을,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다양하고 맛갈스러운 남도 김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축제이다. 김치 담그기, 김치 경연행사, 김치쇼핑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 중외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기간 2014. 10. 4 ~ 8
문의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위원회(062-613-3641~3)
홈페이지 <http://kimchi.gwangju.go.kr>

● 추억의 7080 총장축제

광주 동구 총장로가 가장 번성하였던 70~80년대의 추억을 중심 테마로 기성세대에게는 학창시절 아련한 추억을, 신세대에게는 산 역사교육의 장이다. 70~80년대 모습을 재현한 추억의 거리에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다. 📍

축제기간 2014. 10. 8 ~ 12
문의 총장축제 추진위원회(062-608-2421~4)
홈페이지 <http://www.cjr7080.com>



광주오리탕



송정떡갈비



광주세계
김치문화
축제



추억의 7080
총장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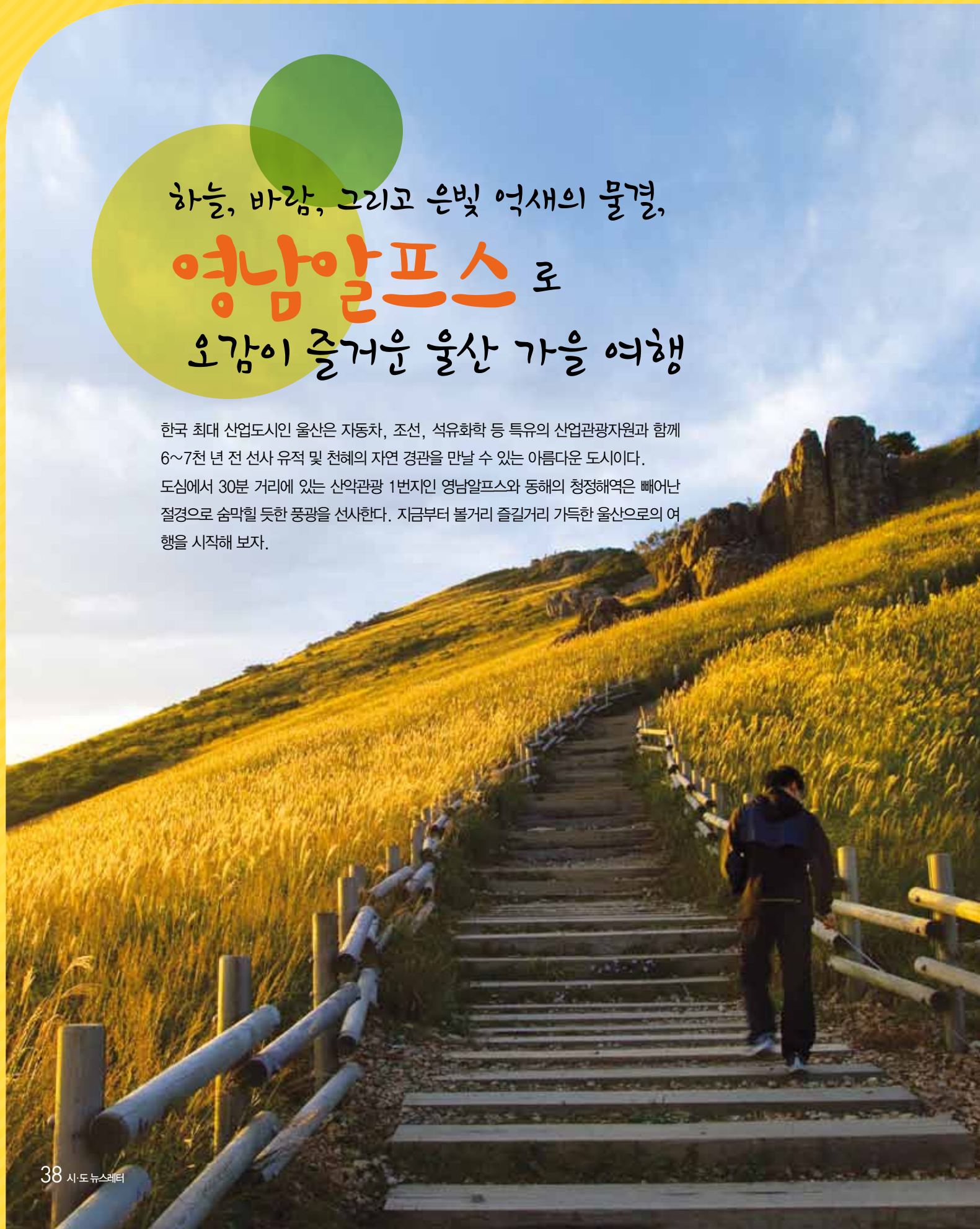


하늘, 바람, 그리고 은빛 역사의 물결,

영남알프스로

오감이 즐거운 울산 가을 여행

한국 최대 산업도시인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특유의 산업관광자원과 함께 6~7천 년 전 선사 유적 및 천혜의 자연 경관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도심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산악관광 1번지인 영남알프스와 동해의 청정해역은 빼어난 절경으로 숨막힐 듯한 풍광을 선사한다. 지금부터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울산으로의 여행을 시작해 보자.



역사 따라, 단풍 따라 걷는 영남 알프스 산행

산악관광 1번지인 영남알프스는 해발 1,000m 이상의 7개 산이 이어달리기를 하는 동남권 최대 산악군이다. 영남알프스의 가을은 은빛 역사의 물결과 함께 찾아온다. 가을이면 광활한 역사밭의 천국인 신불산은 주능선이 역사평원을 이뤄 등산의 백미를 느끼게 해 준다.

매년 가을이면 영남알프스 역사대축제(2014. 10. 3~26)가 역사군락지로 유명한 간월재와 신불산 일대에서 열려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간월재 정상에서 펼쳐지는 울주 오딧세이, 산상음악회(2014. 10. 3, 10. 19)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선율과 함께 춤추는 은빛 역사의 물결이 황홀한 장관을 연출하며 가을날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준다.

가을 영남알프스 산행의 또 다른 백미는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단풍들의 향연이다. 옛날 옛적 기우제를 지내면 바람이 대로 비가 내렸다고 하여 '바래소'에서 유래되었다는 파래소폭포는 울산 12경 중 하나로 경치가 아름다워 지금도 소망을 비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신불산 등산길에서 만나게 되는 형형색색의 단풍과 기암괴석 또한 탄성을 자아낸다.

영남알프스의 주봉인 가지산(1,241m) 또한 울산 12경 중의 하나로 사계절 모두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지만 가을에는 오색찬란한 단풍들이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 한다. 가지산 입구에 자리잡은 석남사와 쌀바위, 귀바위 등 곳곳의 기암괴석과 단풍, 역사밭이 어우러져 있으며, 운문산으로 이어지는 산등성이엔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울산 연양에서 경주로 이어진 국도 35호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285호)를 만날 수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약 7,000~3,500년 전 신석기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구대 바위면에 고래, 거북, 물개, 호랑이, 멧돼지, 사슴 등 다양한 동물과 수렵어로도구 및 인물상 등 300여 점 이상의 그림이 확인된다. 현재 인류 최초의 포경 유적으로 평가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국내 유일의 암각화전시관인 울산암각화박물관에서 암각화로 가는 길목 또한 주변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트레킹 코스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반구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반구대 팜스테이는 역사책에서만 보던 선사시대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마을이며, 300년 전통의 한옥 집청정 누각에서 한복입기, 다도 등 전통문화 체험도 할 수 있다.

●여행 팁

사색의 계절 가을 하늘아래 가장 아름다운 사색, 소통, 치유의 길인 영남알프스 하늘역새길을 따라 고산평원의 은빛 역사와 절묘한 기암괴석, 희귀 동·식물 습지구역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자연과 하나됨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 ▶ 등산대회, 산악마라톤 : 2014. 10. 4 ~ 5
- ▶ 천고지 중주대회, 트레킹페스티벌 : 2014. 10. 25 ~ 26

가지산 쌀바위



신불산 아리랑릿지



반구대 암각화





유경묘-간월재의유일

지삿개
주상절리



봉계
한우불고기



● 추천코스

- ▶ 하늘역새길(역새바람길)
등억온천단지(상북면 등억리 639)→간월재→신불산→신불재→영축산
- ▶ 하늘역새길(달 오름길)
배내고개(상북면 이천리 144-33)→배내봉→간월산→간월재

흥과 맛이 어우러진 울산의 가을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울산의 축제다. 올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울주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울산 옹기축제가 개최되어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국내 최대의 전통 민속 옹기마을인 외고산 옹기마을은 마을 전체가 옹기로 이루어져 이색적인 마을 풍경을 자아낸다. 옹기를 만드는 공방 및 옹기 가마 등 재래식 옹기 제작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옹기를 제작해 볼 수도 있다.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인 처용문화제도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려 처용무, 판소리, 처용맛이 등 처용관련 전통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울산 월드 뮤직페스티벌에서는 전세계 음악과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여행에서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그 지방의 음식이다. 음식 한 그릇에서 그 지방의 향취와 문화, 자연과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의 맛 하면 단연 고래고기와 한우로 울산에서 먹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이다. 봉계지역 참숯불구이와 잘게 다진 한우 양념을 석쇠에 구워 먹는 언양 불고기는 청정지역에서 자란 한우의 육질이 입안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부드럽고 맛있다. 특히 이 지역 특산품인 언양 미나리와 함께 먹으면 아주 별미이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곳의

불고기를 맛보러 온 관광객들로 언양·봉계 불고기 단지는 늘 붐빈다. 매년 10월에는 언양 한우 불고기 축제(2014. 10. 10~12 언양한우 불고기 특구)가 개최되어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울산의 맛인 고래고기는 부위별로 12가지의 다양한 맛과 빛깔을 가지고 있으며, 장생포 고래 문화특구에서 맛 볼 수 있다. 고래고기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고래비빔밥 등 '고래밥상'이 개발되어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동해 특유의 깊은 수심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활어회와 해산물 또한 가히 일품이다.

푸른 바다, 수려한 산, 수 천 년 선사유적이 숨쉬는 울산은 산업·생태에 이어 문화·관광도시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색의 계절, 깊어가는 가을!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잊고 은빛 억새가 춤추고, 형형색색의 단풍들이 곱게 물든 영남알프스로 힐링 여행을 떠나보자. 🍂

언양진미
불고기



석남사



외고산
옹기마을



반구대 만추

국가개조, 지방분권에서 시작하자

2011년 필자가 교환교수로 미국에 있을 때다. 미국의 한 교수는 한국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았다. 그 이유인 즉,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빠른 시기에 세계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었다. 몇 가지 요인을 들어 필자의 생각을 말한 적이 있다. 한국인의 강한 성취욕과 남북분단 상황, 그리고 공무원들의 충원제도 등이 그것이었다. 지금 여기서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엄정한 충원과 정을 통해 사회의 엘리트집단으로서의 공무원 집단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조국 근대화의 기수'였던 것이다.



글 정순관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금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과거로부터 이어 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을 것”이라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가개조론’을 꺼내 들었다. 이어서 7월 8일 정홍원 총리는 국가개조 작업의 4가지 방향을 발표했다. ‘공직개혁’과 ‘부패척결’, ‘안전혁신’과 ‘의식개혁’에 전문분과를 두고 광범위한 국가개조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노정된 한국의 공직사회에 만연된 적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인 셈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의 근본적 문제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가의 무능을 TV를 통해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정부 관료집단의 잘못된 행태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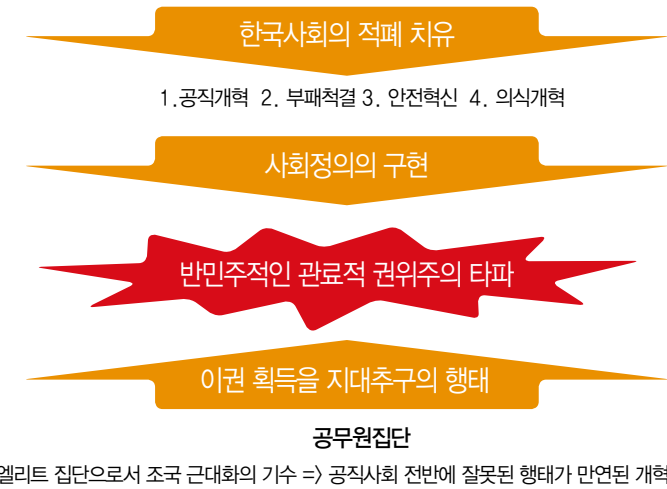
필자는 이런 사회현상의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를 권위주의에서 찾고자 한다. 특별권력관계에서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관료집단은 특별한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일반국민이 갖지 못하는 인허가나 규제 등 특별한 권한을 행사한다. 꽤 오래 지속된 조국근대화의 기수라는 ‘명예’ 속에서 정부 관료집단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까지 ‘관료적 권위주의’가 자라고 있었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로 적나라하게 표출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이 지적한 ‘암덩어리’는 ‘권위’가 아닌 ‘권위주의’일 것이다. 권위는 어떤 행위나 의견 혹은 믿음을 지지하고 방어하는데 사용된 인용자, 혹은 순종을 허락하는 힘이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개인의 사고와 행위에 반한 권위에 무작정 복종하는 체제나 원리이다.

법의 집행과 권한의 행사에서 권위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잉태되는 권위주의는 반민주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구현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그래서 권위주의는 정의로운 사회체제에서 암덩어리

국가의 무능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론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을 것”이라며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가 된다. 관료적 권위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이권을 갖기 위해 관료들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사회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이른바 지대추구의 행태가 만연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좌절감을 주게 된다. 권위주의의 틀에서 이탈한 자는 결국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알면서도 빠져 들기를 강요한다. 어느 새인가 사회의 암덩어리로 자라난 이 거대한 권위주의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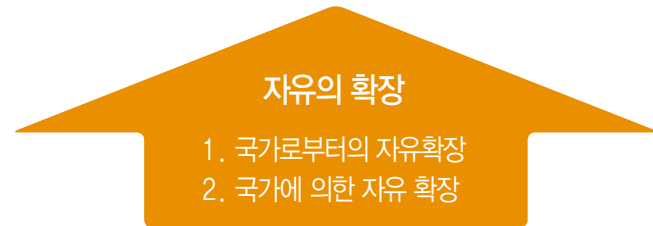
우리사회의 문제를 진단하는 또 다른 설득력 있는 주장도 있다. 엄기호는 「단속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에게 부재한 것은 실존적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사적인 경험을 공적인 언어로 전환하는 관계의 부재다. 이런 관계가 부재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남도 듣고 참조하면 좋은 이야기로 만드는 능력 또한 전승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참조점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누군가의 참조점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회적 존재감을 획득하고 공적인 존재로 설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을 공적 존재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만들어질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 왜 가치 있는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배양의 기회가 사라진 것일까? 여기서 필자는 다시 한 번 개인의 생각에 반한 권위에 무작정 복종케 하는 권위주의, 특히 관료적 권위주의를 주목한다. 그 권위주의가 우리사회를 살맛 나는 ‘우리관계’가 아닌 방관자적인 ‘그들 관계’만 남게 했다.

박근혜정부는 한국사회의 적폐를 치유하고자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 창조경제, 암덩어리 규제의 완화, 비정상화의 정상화, 국가개조론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 노력들을 관통하는 의미를 찾자면 자유의 확장과 관련된다. 무엇인가에 짓눌리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강하게 깔려있다. 문제는 그 자유의 확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다. 자유의 확장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확장이고, 다른 것은 국가에 의한 자유확장이다. 자본주의의 역기능이 많은 현대에는 후자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관료적 권위주의가 잉태할 수 있는 위험은 바로 후자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국정관리와 관련된 국가개조는 어떻게 해야 자유의 확장에 가장 잘 근접할 것인가? 필자는 자유의 확장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지금에 유효한 제도적 틀은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의 구축이

국정관리와 국가개조 달성을 위한 유효한 제도적 틀 =>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 구축

- :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이고 정당한 권한의 분점을 통한 관료적 권위주의의 제어
- : 중앙의 권위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지방에 있고, 지방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상호견제의 제도적 틀의 확립



박근혜정부의 한국사회 적폐 치유 노력 : 창조경제, 암덩어리 규제의 완화, 비정상화의 정상화, 국가개조론

라고 믿는다.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이고 정당한 권한의 분점은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고 이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권위주의, 특히 관료적 권위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더 높은 권위로 재단하여 누르는 과정에서 암세포처럼 자라나는 또 다른 권위주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당한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참여와 주장을 할 수 있는 '중앙'에 대한 '지방'이 있어야 한다. 지방에 반한 중앙의 권위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지방에 있고, 지방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있다면 권위주의는 가까이에 서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견제되고 감시될 것이다. 다양한 지방의 눈과 상식, 즉 사적인 경험이 공적인 언어로 전환되는 건전한 '우리관계'가 사회적으로 복원될 것이다.

다시 한번 자문해 보자. 어떻게 하면 누구도 심각하게 의식하지 못한 동안에 암덩어리로 성장해버린 관료적 권위주의를 개조할 수 있을까? 또 다른 권위로 누를 것인가? 더 높은 권위로 해석하고 재단하여 지시할 것인가? 많은 지식과 경험은 '모든 이의 자유확장'이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국정관리체제에서 상호견제의 제도적 틀, 바로 지방분권적 국정운영체제구축의 필요성이다.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과제와 계획(안)이 이미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수립되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착실히 추진되길 바란다.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 제도의 재구성이라는 점에서 이미 다른 글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으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 확대를 주장해온 견해들에 주로 포함된 내용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과 단서(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의 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헌법적 애로에 막혀있다. 즉, 헌법 제117조 제1항(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제정)을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법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로 개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명시된 법률유보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합헌판결이 있는 상태다. 헌법 제37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은 '최대보장의 원칙'을, 그리고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는 '최소보장의 원칙'을 적용하는 헌법적 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권 및 그로 인한 자주재정권은 헌법적 애로에 막혀있다(이러한 법리구성을 극복할 수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 제도의 재구성

1.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으로 헌법개정이 필요
 -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권 확대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설계
 - : 단순한 기능이양의 차원이 아닌 지방행정체제와 정부조직의 개편이라는 차원에서 고려
3.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 : 지방주민의 선택권의 확대를 통한 주민의 능동적 참여 독려

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 국회와 실무자들은 이러한 해석을 따르고 있음). 특히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각종 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의해 자치입법권은 크게 제약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권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설계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는 역대 정부에서 주요과제로 추진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지방에서 멀리 있는 중앙이 공간적으로만 가깝게 와서 지방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진 것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관계'가 아닌 '그들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주민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해결에 참여하게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해야 한다. 단순한 기능이양의 차원이 아닌 지방행정체제와 정부조직의 개편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개편과정에서의 '관료의 정치'가 경계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생각해야 한다. 자치단체 기관구성방식은 1948년 제헌헌법 제8장의 지방자치 규정과 함께 시작된다. 그러나 1961년 이후 지방자치는 중지되고 30여 년간 중앙집권방식의 지방행정기관이 운영되었다. 1995년에 지방자치가 온전히 복원되면서 이른바 '기관분립형' 기관구성형태가 정착되었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서 지방주민의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1949년 7월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부터 자치단체의 기관구성방식을 '획일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획일성은 제정 당시의 사회 상황을 반영했을 것이다. 민주제도의 정착, 통합된 사회질서의 필요, 지역 간 평등성의 구현 등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관료주의적 사회문제해결방식이 더 선호된 결과로 이해된다. 이제 우리는 자치에 관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변화된 사회에 걸 맞는 자치제도가 필요하다. 획일성은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획일적 자치제도를 국가에 의한 자유확장으로 해석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자치단체별 인구규모는 1만명에서 100만명까지 다양하다. 인구밀도도 km² 당 19명에서 3만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자치단체마다 재정적 여건도 너무나 다르다. 여기에 도시적 특성과 농어촌 특성 등을 감안하면 자치단체의 관리방식을 구조적으로 달리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변화의 방향은 주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성숙을 기대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한 것처럼, 타인의 지혜는 자신을 풍성하게 하며, 더 큰 이해와 우정 그리고 연대로 나아가게 한다. 평화는 정의의 결과이고, 정의는 관용과 협력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정의 구현의 방해물로 권위주의와 체제정당화의 욕구를 지목하고 있다. 획일성에 갇힌 제도를 변화된 사회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이들 언어들은 모두 분권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국가개조가 지방분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다. 🍌

국가개조, 지방분권개헌으로

2014년 잔인한 4월의 세월호 참사는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나 피하기 어려운 무지와 실수 가 아니라 엘리트의 끝없는 탐욕이 부른 인재였다. 돈에 눈먼 선주와 선사임원의 탈법경영,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 부실기업과 결탁한 관료 마피아, 선사의 로비에 놀아난 국회의원의 저질 입법이 빛은 비극이었다.



글 안 성 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는 국가개조의 경종

세월호 참사는 정관 마피아의 척결을 정부개혁의 일차적 과제로 부각시켰다. 사실 정관 마피아의 폐해는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확인되었다. 원전비리, 저축은행사태, 동양증권사태, 철도비리 등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 배후에는 어김없이 정관 마피아가 도사리고 있었다.

M. Johnston은 '부패 증후군: 부, 권력, 민주주의'(2005)에서 부패유형을 독재형, 족벌체제형, 엘리트 카르텔형, 로비시장형으로 구분하면서 한국을 전형적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국가로 지목했다. 그는 한국에서 정치인, 고위관료, 언론사주, 군지도자, 기업가 등의 엘리트들이 학연·지연·이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권력을 유지하고 부패의 전리품을 나누어 가진다고 분석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는 정관 마피아가 중심으로 조성된 엘리트 카르텔이 부른 민초들의 처참한 희생이었다. 팽목항 앞바다에 수장된 304명의 무고한 생명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분노했다.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국가개조를 약속했다. 정치권과 언론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다.

국가개조가 시급할 만큼 한국사회의 부패는 심각하며 한국민주주의 수준은 저급하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한국사회의 2013년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7개 국가 중 46위를 기록했다. 1년 전 45위에서 46위로 하락한 것이다. R. Inglehart 등이 '효과적 민주주의 지수(EDI)'로 계산한 2012년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80개 국가 중 53위에 불과했다. 2010-2012년 세계가치조사에서 한국인 4명 중 3명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근래 정부불신은 범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인의 정부불신도는 어느 선진국의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권력을 시민 곁으로 이동시키는 지방분권개헌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뼈아픈 교훈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엘리트 카르텔을 제어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정신을 충실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행 '87년 헌법은 독재청산과 대의민주주의 부활의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고 20여 년 동안 입헌민주정치를 지속시켜온 공적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조에 규정

국가개조, 지방분권개헌으로

[국민주권의 민주공화주의 원리 실현 및 권력의 시민 이양을 위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정관 마피아가 중심으로 조성된 엘리트 카르텔이 부른 민초들의 처참한 희생

중앙집권권화 : 절대권력의 절대부패

대한민국 =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국가, [부패 증후군 : 부, 권력, 민주주의], M. Johnston

엘리트들이 지연·학연·이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권력을 유지하고 부패의 전리품을 나누어 가진다고 분석

민주공화주의 원리 실현을 위한
수단 결여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주의 원리의 미구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된 민주공화정신을 실현할 구체적 수단을 결여하고 있다.

권력은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중앙집권화 속성을 띤다. 일찍이 A. Tocqueville은 정성을 기울이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다가올 민주주의시대에 중앙집권이 자연스런 정부현상으로 나타날 것"을 예견했다. 더욱이 중앙집권 권력은 절대주의를 지향한다.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에 대한 Acton 경의 경고는 곧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경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예방하고 국민주권의 민주공화정신을 실현하는 헌정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시민 곁으로 이동시키는 획기적 지방분권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23년 간 지방분권정책이 추진되었지만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와 국세 대 지방세는 각각 8:2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지방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4년 44.8%로 무려 24.6%나 급락했다. 지방분권개헌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해온 지방분권개혁에 생기와 동력을 불어넣는 국가개조의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 지방분권개헌지침

2012년 10월 9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방분권개헌연구단이 작성한 지방분권헌법개정안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발표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자유·민주·공화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헌법정신의 토대 위에서만 온전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요지의 개헌제안문과 함께 10대 지방분권개헌지침을 제시했다.

- (1) 헌법 전문과 제1조를 개정하여 자치와 분권이 헌법정신의 토대이며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한다.
- (2)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치역량이 축적된 뒤 곧바로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치 등 자치와 분권의 이념에 기초해 중앙권력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 (3) 법률의 종류를 국가법률과 자치법률로 이원화하고, 자치법률의 범위와 국가법률과의 관계 등을 헌법에 규정하며, 자치법률의 입법권한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로 선출되는 광역자치의회에 부여한다.
- (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 민주적 자치의회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형태와 내부조직을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5) 보충성원칙은 국가와 지방의 역할배분에 지방의 우선성을, 자치행정에 있어서 풀뿌리 자치의 우선성을 부각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 (6)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구조를 헌법에 명시하고,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재정조정 원리를 규정한다.
- (7)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법률을 집행하거나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로 충당하고,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경우 재원까지 함께 이양하도록 규정한다.

[추가. 강조되어야 할 두 가지 개헌과제]

1. 엘리트 카르텔과 대표성 실패를 예방하고 교정할 국민발의제와 국민투표제의 추가적 도입
2. 양원제, 즉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도입을 자치역량이 축적된 뒤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차기 개헌의 핵심과제로 설정 : 지역간 이해갈등이 정치발전의 가로막고 사회안정을 해치는 한국에서 지역적 소수의 이익을 다수결원리로부터 보호하고 융화상생의 정치를 실현하는 지름길

- (8) 사법분권, 자치경찰제, 검사장직선제 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험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선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 (9)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기회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연합회가 평화통일을 위한 지방자치혁신을 주도하도록 유도한다.
- (10) 지방자치의 주요 사항을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추가. 강조되어야 할 두 가지 개헌과제

상필자는 상기 지방분권개헌연구단의 일원으로서 지방분권헌법개정안이 발표된 후 계속 심사숙고한 결과 이미 제안된 헌법개정안에 추가 및 강조되어야 할 두 가지 개헌과제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첫째는 엘리트 카르텔과 '대표성 실패'를 예방하고 교정할 국민발의제와 국민투표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2년여 전 국회에 엘리트 카르텔의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일명 김영란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공개되자 대가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정관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국민의 지지는 대단했다. 당시 정부의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의 국민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의 심의를 마냥 미루다가 세월호 참사 후 정관 마피아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지난 7월 10일에야 비로소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곧바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입법될 지는 미지수다. 세월호 참사라는 특별한 상황이 법안의 통과를 압박하고 있지만 엘리트 카르텔에 위협을 줄 부패방지 대책들을 번번이 좌절시킨 전력 때문이다.

김영란법안이 폐기되거나 종이호랑이 법률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확실한 대책은 법률에 대한 국민발의제와 국민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법률이 입법되지 않거나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심각하게 왜곡된 경우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입법을 확정 또는 시정할 수 있는 직접참정제를 도입하는 개헌이 요구된다.

더욱이 공약 파기와 같은 '대표성 실패'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해서도 국회입법에 대한 직접참정제가 필요하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새누리당의 기득권 고수, 새정치민주연합의 포기번복으로 2012년 여·야 대선공약은 파기되었다. 60~70%의 국민이 바라는 주요 정치개혁이 무산된 것이다. 이런 대표성 실패를 예방·교정하는 확실한 방안은 역시 국민발의제와 국민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발의와 국민투표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정치권의 고질적 지대추구행위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직접참정개헌이야말로 심각한 정치불신을 불러온 지극한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껏 높이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둘째는 통일한국시대 포용상생정치를 선도할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도입으로 2014년 5월 하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교·안보·통일에 전념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분담하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치를 명시한 양원제 개헌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155명이 가담한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찬성, 단원제 유지'로 응수했다. 아직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의 초점을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분리에 맞추고 있다. 양원제 개헌과 같이 국회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정치개혁은 주요 개헌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단원국회는 동질적 국민의 일반의사가 단원제를 통해 효

[참여헌정주의를 실현하는 개헌과정]

약육강식의 권력정치에서 벗어나 상이한 이익들 사이에 이성적 대화와 상생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공론화 의사결정과정

1. 개헌과정은 국민이 헌법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도록 설계 : 헌정과정에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
2. 개헌과정은 정치적으로 능동적인 집단에게 발언권 기회를 주도록 개방적으로 설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대표의 참여 보장
3. 개헌과정은 이해당사자의 자기이익 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설계 : 협상과 토론을 통해 차이를 드러내고 융화를 도모

과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은 지역에 기초한 실질적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질적 집단 간의 이해갈등이 다수결원리가 지배하는 단원국회에서 충분히 조정되거나 타협되기 어렵다. 지역의 소수이익이 다수결원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그 유력한 대안은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 7개국(G7)은 모두 양원제 국가다. 인구 1,200만 명 이상의 15개 OECD국가 중 단원제 국가는 터키와 한국뿐이다. GDP 15위 국가 중 상원이 없는 나라도 중국과 한국뿐이다. 그나마 중국은 국회에 해당되는 전인대(全人代)의 대표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문적 상원 역할을 수행하는 정협(政協)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GDP 15위 국가 중 상원이나 유사상원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적절히 설계된 지역대표형 상원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예방하고 치유하여 선진 통일한국을 세우는 핵심 헌정제도도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지역대표형 상원은 다수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지역갈등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대표들의 국회입법참여를 통해 지방분권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둔 지역대표형 상원은 정당 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넷째, 지역대표형 상원은 입법과정의 '성찰과제고' 기회를 확대시켜 졸속입법을 예방하고 입법품질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지역대표형 상원은 북한의 민주적 통합과 통일한국의 국민통합을 고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치로 인한 국회 비대화와 엘리트 특권강화를 우려하는 국민이 있다. 이미 연구자들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양원제 개헌안을 제시해왔다. 이제 양원국회의 장점을 살리면서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참여헌정주의를 실현하는 개헌과정

제10차 개헌과정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참여헌정주의 개헌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개헌과정은 국민이 헌법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길은 헌정과정에 국민을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시민교육을 제공하는 지역별 개헌시민회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헌과정은 정치적으로 능동적인 집단에게 발언권 기회를 주도록 개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대표형 상원에 관한 논의과정에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지역대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개헌논의가 정치세력들 간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치적 정글로 전락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이성적 담화를 촉진하는 헌정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제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셋째, 개헌과정은 이해당사자의 자기이익 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편견의 억제'라는 절차적 정의원칙에 위배된다. 개헌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편견을 억제하는 방안은 이들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극단적 사례로 2000년대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와 Ontario주는 선거법개정안을 마련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치인들을 전면 배제시켰다. 그러나 개헌정치에서 정치인을 배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헌과정의 주요 목적은 정치와 자기이익 투입을 차단하기보다 협상과 토론을 통해 차이를 드러내고 융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개헌과정은 약육강식의 권력정치에서 벗어나 상이한 이익들 사이에 이성적 대화와 상생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공론화 의사결정과정이어야 한다. 🍎

중앙-지방 지방재정부담 협의제도 도입되어야



글 김홍환
(협의회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해 지방은 행·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으로서의 지위와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이중적으로 갖기 때문이다.

즉, 중앙정부가 국민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정책이 집행되며,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로서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인 지방행정청으로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 국고보조금관



리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정책목적사업인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보다 우선하여 지방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시스템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자치단체로서의 지위가 제한된다는 것에 있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 정책결정이 이러한 지방자치 기능이 발현될 수 없는 조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중앙정부 정책결정이 지방재정부담을 유발시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이다.

구체적 이해를 위해 지방재정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의 지방재정구조를 간략히 정리하면 총 재정의 80%를 사업비로 투입하고 20%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이다. 총 재정의 80%를 차지하는 사업비는 국가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가 45%를 차지하고 나

머지 35%는 명목상 자체사업비다. 그런데 35%의 자체사업비를 살펴보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과 같이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는 법적·의무적 경비가 상당부분 차지하며, 이밖에 필수공공서비스 유지관리 비용인 공원 및 녹지관리,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 관리 등 성격상 경상적 경비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합하면 약 27%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약8%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거시적 접근은 지방재정 전체를 두고 분석한 것이기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있는 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8%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와 같이 재정력이 좋고 재원규모가 큰 자치단체를 포함한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자치구의 경우는 자율재원이 거의 없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여건은 주민에 뜻에 따른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정여건이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의 결과가 아니라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 사업 확대, 기초연금 도입 등 최근 몇 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중앙정부가 이처럼 지방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지방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가장 실효력 있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거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반영 여부는 전적으로 중앙정부 임의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지방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크게 직접적 협의 제도를 마련



하는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구속적 있는 지방의견 반영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직접적 협의제도는 개별 중앙부처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부담을 수반시키는 정책을 입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의 대표인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의 협의체인 중앙-지방 협의기구를 제도화 하고 이를 통해 재정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국회와 국무회의 의안제출에 있어 부수서류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직접적 협의제도가 국회를 제외한 정부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밖에 국회 의안심의 과정에서 지방대표가 참여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지방자치 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정운영시스템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국정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보장이 필요한 만큼 중앙-지방 재정부담 협의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

중동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이해



글 안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중동정치학)



1. 한국과 중동

‘중동’ (中東, Middle East) 은 아라비아반도를 중심으로,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등의 레반트 (삼) 지역과 이집트 및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란과 터키를 잇는 광활한 지역이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양 대륙에 걸쳐 있으며 지중해를 끼고 고래로 유럽과의 교역과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어져 왔다. 유목문화와 이슬람 등은 아직 우리에게서 일견 생소하고 서름서름하다. 그러나 고대 문명의 요람으로 오랜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었던 곳도 바로 중동이었다.

우리와 중동 역시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용의 설화는 그저 옛이야기로 친다고 하자. 하지만 실제로 신라와 고려시대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당(唐)을 거쳐 한반도까지 진출했던 기록은 도처에 있다. 당시 아라비아와 한반도를 잇는 그 긴 해상 실�크로드를 곧 아시아 대륙의 끝과 끝을 잇는 교류의 비단길이었다.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사랑이야기가 담긴 페르시아 서사 ‘쿠쉬나메’는 천년 전 한국과 중동간의 교류 그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비단 오래 전 역사뿐만 아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중동의 뜨거운 모래 (熱砂) 위에 발을 디디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3년 삼환기업의 카이바-알울라 고속도로 건설을 필두로 70년대와 80년대 초, 내 아버지 세대들은 그리운 가족을 고국에 두고 50도에 육박하는 사막에 이삼십대의 청춘을 쏟았다. 그리고 그 땀과 눈물은 곧 가계를 살리고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다. 더불어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끈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는 중동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때론 오일쇼크도 있었지만, 중동의 석유공급 없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산업화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으리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은 또 어떤가. 이젠 우리 근로자들이 70년대 맨주먹 쥐고 사막에서 모래 다져가며 일하고, 바다 준설하며 항만을 건설하던 시대가 아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중동 각처에서 주 계약자 (contractor)로 일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근로자들이 땀을 흘리며 열사의 사막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대규모 건설공사를 직접 책임지고 있다. 건설 플랜트 각 분야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수주실적을 자랑한다. 건설플랜트뿐 아니다.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및 백색가전 등 다양한 상품의 전략적 수출시장이 된 지 오래다. 한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석유 수입의 82%를 걸프지역에서 들여올 만큼 중동은 우리 산업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중동은 비록 생경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협력과 교류의 역사가 늘 상존해 왔고 지금 역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2. 변화의 기로에 선 중동, 특히 걸프지역

그런데 이 중동지역이 최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소식은 온통 비극적 상황뿐이다. 재스민 혁명으로 불리는 아랍 정치변동은 민주화로 이어지지 않고 독재자의 빈자리는 이제 극도의 혼돈으로 채워지고 있다. 무정부 상태의 리비아, 군부가 복귀한 이집트, 혼돈을 거듭하는 예멘, 그리고 20만 가까운 시민이 희생된 시리아 등은 비극 그 자체다. 20세기 가장 만성적

갈등이라 여겨졌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21세기에도 지속된다. 하루도 총성과 포연이 그칠 날이 없는 곳이 바로 중동이다.

급기야는 알카에다보다 더 폭력적이고 잔인한 집단인 ‘이슬람국가’ (IS)가 이라크와 시리아를 누비며 증세적 잔인 무도함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인 중군기자 제임스 폴리의 비극적 참수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폭격으로 인한 희생,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난민, 불안한 미래 등이 겹쳐지며, 우리 한국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닫기 발판이었던 중동은 이제 극도의 불안정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 중동은 더 이상 과거 역사책에서만 보여지던 변화 없는 정체적인 중동이 아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정세에 던져진 곳이다. 내달, 내년의 중동정치질서를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매일같이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자유를 얻기 위해, 비참한 삶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중동 도처에서 사람들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지역 왕정국가들은 안팎의 위협을 바라보면서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석유 캐서 팔아 막대한 부를 향유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음을 목도하고 있다. 이집트, 리비아 등 기존 아랍 권위주의 국가들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혼란을 겪기 시작했고, 이러한 혁명의 열풍은 언제라도 왕정국가들에 상륙할 수 있다. 결국 왕정국가들은 국민들을 다독이고, 불만세력을 위무하기 위해 국가개조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신도시도 짓고, 과학기술 첨단 산업단지 및 대학을 건설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거대한 첨탑빌딩도 발주하고 있다. 특히 물 부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담수화 플랜트 등 프로젝트도 연이어 시장에 나오고 있다. 한국에게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3. 한국과 걸프 아랍, 지방정부간 미래 협력의 비전

70년대 한국은 중동에서 철저한 ‘을’이었다. 심지어는 석유를 사오는 구매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판매자 우위의 시장이었기에 늘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 조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했다. 그러나

2014년 오늘은 사뭇 다르다.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윈윈하는 협력이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동국가, 특히 걸프 산유국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에 전념하면서 한국의 성장 신화를 도입하고 싶어한다. 작은 반도국가가 어떻게 석유 한 방울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산업을 일으켰는가에 관한 궁금증이 많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도입, 응용해보려 하고 있다. 중동의 역사를 어렵게 만들었던 유럽 열강의 식민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 특히 정치적 부담이 거의 없는 한국과의 협력은 현재 중동 각국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중동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에너지 및 거대 건설플랜트가 주 진출시장이라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걸프 산유국은 유목민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족단위의 정체성이 매우 강하며, 각 유력 부족들 별로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영역이 획정되어 있다. 정치 문화도 국가 단위의 정체성만큼이나 부족주의적 정체성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걸프 왕정인 UAE의 경우 7개의 토후 (Emirates) 들이 나누어 다스리고 있다. 물론 연방 (중앙) 정부의 권한과 주권은 절대적 성격을 갖지만, 지방별로 부족의 전통과 특성을 살리고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걸프 아랍국가들의 경우 행정구역상 ‘주’ 단위의 유력 부족의 영향력은 나름 강하게 작동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 지방정부는 사우디, UAE 등의 ‘주’ 단위 부족 공동체와의 접점마련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들과의 협력은 거대 산업이 아니라, 주로 농업 협력 (메가 팜 프로젝트), 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 의료 협력, 대한 투자 등의 중간규모 단위의 산업을 독려하면 좋을 것이다.

우리 각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는 문화, 전통 등을 걸프 현지에 적극 소개하는 프로젝트도 고려해 볼직하다. 중동 전역의 혼돈 상태에서 국가와 국가간의 전통적 협력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되, 오히려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교류확대를 추구하면 어떨까? 지방정부간 교류를 통해 중동에 편재한 전반적인 안보 불안정성을 상쇄할 수 있는 작은 틈들을 여러 곳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예스 구미,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의 장으로 피어나다



글 신현숙
(구미시 국제통상과 국제협력담당)

한국 근대화의 발상지 구미시가 중국·일본 등 6개국 8개 도시와 자매우호교류를 체결하며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2013년 2월 22일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유치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그리고 2014년 9월 1일, 그 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의 장으로서의 구미시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1999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번갈아 개최해 온 한·중·일 지자체 간의 대표적인 국제회의이다. 구미시는 컨벤션센터 구미코(Gumico)를 갖추고 있는 만큼 국제회의의 유치에 남다른 열정으로 세계 속의 구미로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해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구미시는 이번 회의를 유치하고자 가장 먼저 경상북도와 공동주관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제행사의 경험이 풍부한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주관한다면 유치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구미시는 경상북도와 몇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회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구미시와 경상북도의 노력은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유치라는 성과를 낳았다.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한 준비과정

회의 유치가 확정된 후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첫 시작으로 지난해 일본 도야마에서 개최된 제15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가했다. 도야마 회의 개최 과정을 분석하여 구미 회의에 벤치마킹 기회

로 삼기 위해서다. 도야마 회의는 일본 특유의 꼼꼼함과 섬세함이 빛나는 회의였다. 하지만 3개국 지자체가 만난 만큼 좀 더 활기차고 상호 간에 마음을 나누는 분위기가 다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남유진 구미 시장은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관계관 회의를 주관하면서 이번 구미 회의는 무엇보다 3개국 지자체가 한 자리에 모여 강한 공동체 의식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면서 구미다운 회의를 개최하고자 강조했다.

구미시는 이번 회의에 보다 많은 국내외관계자가 참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4년 초부터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구미시청 30개 부서 93명의 직원들이 경상북도 관내 지자체는 물론 중국,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를 방문하여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에 대한 소개와 함께 방문 지자체와 자매·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 일본 지자체의 방문도 요청했다.

중국, 일본 지자체에 대한 홍보활동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경상북도, 구미시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구미시는 중국 장사시, 심양시, 광안시, 위남시 등을 방문하여 참가 요청을 했으며, 경상북도는 중국의 여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참석을 독려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 일본사무소도 그 동안 구축해왔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지자체에 참가를 요청했다.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막

9월 1일,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열렸다. 국내외 5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구미시에 도착했다. 회의는 경상북도와 구미시만의 특색을 살리고자 '인문교류 확대를 통한 한·중·일 교류 활성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날 저녁 개회식을 겸한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9월 2일 오전 한국 이인선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중국 동펑밍 저장성 이우시 부시장, 일본 사토미 스스무 나가사키현 부지사의 주제발표로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열렸다. 오후에는 2개 세션으로 나누어져 부제 발표가 있었다. 각 세션은 '지방정부 국제행사 상호참가 확대를 통한 관광·문화교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통상 교류 확대'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폐회식에서 남유진 구미시장은 구미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한·중·일 관계의 결끄러움을 해소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3국간의 화해와 소통을 모색할 때이며, 국제사회에서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한·중·일 지방정부 시민간의 우의 증진과 상호이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 등을 제시했다.

구미시는 제16회 한·중·일 지방자치 교류회의의 유치를 위한 준비부터 회의 폐막까지 숨가쁘게 달려 왔다. 쉬운 여정은 아니었지만 한·중·일 3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개최도시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다. 이번 회의로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춘 도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 구미시가 되어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남유진 구미시장 특별인터뷰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구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세계에 구미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까지 매일 동분서주 바쁜 나날을 보내며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준비해 온 남유진 구미시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Q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한중일 지자체 간 교류를 대표하는 국제회의입니다. 특히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 회가 처음입니다. 소감이 어떠하신가요?

동북아 3개국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자리잡은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은 시장으로서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쁨과 영광을 42만 구미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Q 이번 회의 개최가 구미시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민선 4기 이후 외국인투자유치 11조 달성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고향 위남시, 등소평 국가주석의 고향인 광안시와의 우호도시 결연체결 등 한·중·일 3개국 지방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올해 회의 주제인 '인문교류 확대를 통한 한·중·일 교류 활성화'는 구미시의 '아은 아카데미'와 '한책 하나 구미운동' 시책과 상통하여 의미가 큼니다.

Q 이번 회의는 어떠한 방향을 염두하고 준비하십니까?

한·중·일 3국은 오래 전부터 인문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는 우리가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동북아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일 지방정부들이 더욱 치열해지는 무한 경쟁과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문교류를 통해 한 단

계 더 도약함은 물론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참여 제고를 위해 세션별 부제발표를 확대했으며 더 많은 시책을 공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Q 회의를 통해 구미시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구미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구미시는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 회의를 통해 국내외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대거 참여와 행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여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세계한상대회, 세계산림박람회, 전국 유소년 리틀야구대회 등 국제회의 및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구미시의 목표입니다. 🌟





서울특별시, 일제 한글말살로 희생된 선열 33인 기념탑 건립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에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희생된 애국 선열 33인을 기리고 기념하는 '조선어학회 한글말 수호 기념탑'을 종로구 세종로 공원 내에 건립했다.

'조선어학회 한글말 수호 기념탑'은 2011년부터 시작한 '한글 마루지(랜드마크) 조성사업'의 하나로 광화문 일대를 한글 역사문화 중심지 만들기 일환으로 10m 높이의 청동과 오석 재질로 세워진 기념탑엔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구금돼 모진 고문을 당한 애국선열 33인의 이름과 조선어학회 한글말 수호 투쟁기, 옥중 고문기 등이 새겨져 있다. 기념탑이 세워진 세종로 공원엔 앞서 시가 시민 참여로 총 1만1172개 한글을 바닥에 새겨 조성한 한글글자마당이 있어 그 의미를 더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광화문 일대에 '한글 사랑방 조성'(15년)과 '세종대왕 생가터 기반 한글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14 부산 ITU 전권회의 개최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세계최대행사인 '2014 부산 ITU 전권회의'가 개최된다. ITU(국제전기통신

연합)는 유엔산하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국제기구로서 위성이나 이동통신의 핵심요소인 전파를 국가별로 분배하고 나라별로 다른 정보통신 관련 기준을 표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올림픽 처럼 4년 마다 한번씩 열리기 때문에 'ICT 올림픽'으로 불린다.

전세계 193개국 ITU회원국의 장·차관급 인사 및 회의관계자

3천여 명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업과 국내외관광객 등 60만명 이상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7,000여 억 원에 달한다.

행사개최를 통해 부산과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정보통신기술을 전세계에 알리고, 부산기업의 ICT제품 수출시장 확대 및 다변화, 관광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전시·컨벤션도시 부산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14차 세계기생충학회 총회 유치 성공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제13차 세계기생충학회 총회'에 합동유치단을 파견, 차기 대회 개최를 강력히 추진한 태국 방콕과 치열한 경쟁 끝에 대형 국제회의 '2018년도 제14차 세계기생충학회 총회'를 대구로 유치했다.

50여 년 역사를 가진 세계기생충학회(World Federation of Parasitologists, WFP)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연계해 전 세계 60여 개국 100여 개 회원학회가 기생충 연구 및 기생충 질병 관리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기울이고 있다.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를 통해 총 3,000여 명 이상 기생충 관련 저명한 의학·과학자들이 모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나눈다. 이번 대회 유치 결과로 오는 2018년 전 세계 총 3,000여 명의 기생충 관련 학자들이 대구를 방문하게 된다.

이번 대회의 한국 유치에는 그동안 한국기생충학·열대의학회가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저명한 학술적인 기반과 유치단의 용태순 교수, 채종일 교수, 엄기순 교수 등 활발한 네트워크가 빛을 발했다. 특히 대구시와 대구컨벤션관광부, 한국관광공사로 구성된 유치단의 활동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산하 현지 멕시코 한국문화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여러 조직이 조화를 이루며 이뤄낸 결과다.

세계 주요 관광도시 방콕을 제치고 많은 해외 학자들에게 대구를 새로운 컨벤션 개최지로 각인, 지역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

지 및 한국뇌연구원과 같은 관련 인프라를 전 세계 참가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133억원)와 고용 유발 효과(148명)도 기대된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세계적 규모의 의학행사 유치에 성공해 메디시티의 인지도 제고에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참가자와 주최자 모두가 만족하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총회를 치를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전 지역과 협력도시(안양, 하남)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23개 종목에 아시아 42개국, 6천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해 대회 규모와 선수단 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경기대회는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기극복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이 참가하는 보치아는 한국이 강세 종목으로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동계종목인 컬링과 비슷한 보치아는 표적구와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겨루는 경기다. 선수들의 집중력을 요하며 흥미진진한 박진감을 경험할 수 있다.

대회 폐회식 공연은 박칼린 총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공연은 'Impossible Drives Us(불가능이 우리를 이끈다)'란 주제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선수들의 패기와 옆에서 함께한 가족, 의사, 발명가 등 조력자들의 열정을 재조명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존 국제대회 폐회식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4 광주비엔날레 터전을 불태우라

문화예술의 축전 '2014 광주 비엔날레'가 9월 5일 성대한 개막 축포를 올렸다.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제스카 모건 테이트모던 큐레이터 총감독의 지휘 하에 39개국 작가 106개 팀(115명)이 참여해 '터전을 불태우라(Burning Down the House)'라는 주제로 11월 9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중외공원 일대에서 전시 및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5개의 전시실로 운영되는 광주비엔날레에는 총 35개의 신작이 포함됐다. 변화와 개혁을 향한 움직임 역동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퍼포먼스 부문을 대폭 강화했다. 광주역과 광천터미널 등 오월의 현장 5곳에서 펼쳐지는 민중미당극과 양림동 일대에서 펼쳐지는 '오월가족 해원 퍼포먼스' 등 광주의 오월정신을 발랄하게 해석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예술작품으로 탈바꿈한 518번 시내버스가 '518 아트버스'라는 이름으로 전시 마지막날까지 오월사적지를 코스로 운행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2014 치매극복 전국 걷기대회' 개최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는 9월 13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대전광역시치매센터와 함께 '2014 치매극복 전국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 국민의 치매예방과 극복을 기원하는 대국민 행사로 광역치매센터가 설립된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전국적



행사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포함한 대전 시민 약 2,500여 명과 함께 치매로부터 가정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힘찬 행진의 물결이 이루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2014 치매극복 전국 걷기대회 대전지역 행사'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충남대병원에서 위탁 추진하는 대전광역시치매센터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울산광역시,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업무협약 체결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는 8월 29일 울산시청 회의실에서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청 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울산시 북구 진장 명촌 지구 부지면적 1,428㎡에 연면적 약 2,800㎡(약 850평) 규모로 109억 원의 예산(방송통신발전기금 50억, 시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방송제작 및 교육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울산시는 설립 공간 제공, 센터 운영 및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관련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시청자가 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이용해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방송시설·장비들을 대여하게 된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2005년 부산, 2007년 광주에 이어 올해 강원, 대전,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개관하였으며, 2016년까지 울산과 서울(성북)에 미디어센터를 추가 설립하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영평사 장군산 구절초 꽃 축제 개최



청정한 물과 공기를 간직한 장군산 영평사에서 10월 2일부터 19일까지 구절초 꽃 축제가 열린다. 개막일인 10월 2일 산사음악회를 시작으로 축제 기간 동안 작은 음악회와 구절초 그림 및 사진

전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국수만발공양과 구절초 꽃차, 효소, 연꽃차 무료 시음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구절초 천연비누만들기, 전통민속놀이체험 등 다양한 체험도 마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영평사에서 머물며 구절초를 비롯한 장군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템플스테이 체험도 가능하다.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선인장의 화려한 외출, 2014 경기 선인장페스티벌



우리나라 선인장 주산지인 경기도가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2014 경기 선인장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세계로 수출하는 경기 선인장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농업축체인 선인장 페스티벌은 올해 11회째로 고양시 일산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선인장의 화려한 외출, 거리를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선인장과 관련된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이벤트가 펼쳐졌다.

경기도에서 개발한 신품종 등 연구성과를 비롯한 수출홍보관, 선인장 인테리어 및 희귀선인장 전시, 아프리카 식물 등을 볼 수 있었으며 공모 상품 경진대회 작품 및 선인장 조경동산도 관람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가족, 커플이 함께 만드는 다육식물 모듬화분 무료체험행사와 선인장 화분 만들기, 비누, 압화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

길 수 있었다. 또한 행사기간 중 소비자들이 농가에서 생산한 선인장과 가공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판장도 운영했다. 관람객들은 도심속 축제를 통해 선인장의 아름다움과 힐링을 체험할 수 있었다. 본 사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아이템 또는 제품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디자인을 개발하는사업으로, 최종 결과물은 상품화 되어 판매·유통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강원도
GANGWON PROVINCE

강원도, 국내 최초 커피테마파크 춘천 유치

강원도가 전 세계인이 즐기는 커피를 주제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 테마파크'를 춘천시에 조성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동용 춘천시장은 지난 8월 28일 춘천시청에서 ㈜탐앤탐스 대표와 지역인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피 테마파크를 조성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합의된 ㈜탐앤탐스의 구상에 따르면 조성 예정인 남춘천 산업단지 1지구 26만㎡(8만여평) 부지에 약 1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생산 및 물류시설', '자연친화형 커피파크', '관리 및 교육시설'등을 2017년까지 완공하기로 하였으며, 세계최고의 가족단위 체험 및 휴양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곳에는 ㈜탐앤탐스의 경기도 남양주 소재 공장 이전과 함께 11여 개 계열사·협력사가 함께 집단이전할 예정이어서 최소 1,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커피 관련 생산 및 물류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춘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춘천레고랜드, 남이섬 등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명소 부상으로 연간 가족단위 국내외 관광객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애니메이션,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충청북도, '한·중·일 청소년 바둑대회' 후원협약 체결

충청북도(이하 충북도)가 (사)충북바둑협회(회장 조기식), (사)한국바둑방송(대표 윤여창), (사)충북국제협력단(이사장 김동원)과 8월 26일(화) 도청 소회의실에서 '한·중·일 청소년 바둑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한·중·일 청소년 바둑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청소년들의 바둑실력 향상과 우호증진을 위해 2005년부터 일본 아미나시현, 중국 사천성, 그리고 충청북도가 매년 순회 개최하는 국제대회로서, 올해 9회째를 맞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충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3국의 선수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협약으로 충북바둑협회는 충북의 대표선수 선발과 한중일 청소년들의 바둑대회를 진행하고 국제협력단과 홈스테이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한국바둑방송은 바둑대회 공개해설을 포함한 행사의 전 과정을 스케치하여 전국에 소개함으로써 이번 충북대회가 충북도민은 물론 전국의 바둑 팬들과도 함께 소통하는 특별한 대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한국바둑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충북도 국제행사인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와 고인쇄박물관 등 충북의 문화관광 자원을 전국에 소개하면서 "충북바둑협회, 한국바둑방송, 충북국제협력단과의 후원을 통해 이번 충북에서 개최되는 9회 대회는 중국, 일본에서 개최되는 행사와의 차별성으로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충남도청어린이집,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획득

충청남도(이하 충남도)는 도청 어린이집이 지난 8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서비스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도입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건강과 영양, 안전 항목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인증하는 제도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국가차원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평가하고 인증해 보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은 오는 2017년 7월 14일까 지이며 도청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판이 부착된다.

이번 어린이집 평가인증 획득으로 도청 어린이집의 보육 질에 대한 공적인증으로, 영유아 보육을 맡긴 학부모들이 보육환경에 대하여 한 층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三樂(삼락)농정 도민 의견 수렴



전라북도(이하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삼락(三樂)농정' 구현을 위해 도민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전북도는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여건 변화, 농가인구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과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6기 5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농업·농촌 삼락농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 사람 찾는 농촌, 제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 등 삼락농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농업·농촌·농민 분야별 전문가 16명으로 태스크포스(TF팀)를 구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9월25일까지 온라인으로 도민 모두를 상대로 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별별공리'를 치면 전북도가 운영하는 도민 의견 수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며 서식을 내려 받아 응모하면 된다. (<http://idea.ib.go.kr>)

전북도는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 가을 단풍 홍콩에 알린다

전라남도는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과 공동으로 홍콩 현지에서 8월부터 3개월 동안 '전남 가을단풍 캠페인(Jeonnam, Korea Maple Beauty)'을 전개한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캠페인은 전남의 아름다운 단풍을 소개하고,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에어부산, 홍콩 여행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처음 추진한 2012년에는 전남 상품을 구매한 홍콩 관광객이 4천 839명이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38.5%가 늘어난 6천702명을 모집했다. 캠페인은 현지 버스 랩핑광고(102대), 주요 12개 인쇄매체 광고, 페이스북 광고(9월) 등 특별광고 형식으로 이뤄진다. 일반 소비자 관심 유도를 위해 홍콩지사 누리집(Chingu Korea) 및 페이스북을 활용한 온라인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항공권, 전남 관광업체 경품, 방한관광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며, 에어부산에서는 캠페인 기간 중 항공권 특별할인 이벤트 및 구매자 대상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개별 관광객 확대를 위해 홍콩 유명 사진작가인 토니호(Tony Ho), 리처드 라우(Richard Lau)가 함께 만든 전남 가을단풍 홍보전단을 전문 여행사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홍콩지사에서는 여행사와 공동으로 개별 관광객 대상 전남관광 설명회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터키 산림청과 업무협약

경상북도(이하 경북도)는 지난 8월 18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터키 산림청과 농림분야 상호 협조와 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경북도와 이스탄불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3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에 이어 농림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협력에 결실을 맺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적자원의 교환연수와 기술교류를 통한 농림업



분야의 능력배양, 산지과수·버섯·약초·인삼·유기산림의 재배 및 생태와 관한 연구개발, 유용한 산림자원의 상호 교환 및 이용에 관한 협력 등이다.

이스마일 위즈메즈 터키 산림청장은 “지나해 세계문화엑스포 기간 중 이스탄불에서 개최됐던 ‘한-터키 버섯수출농업 세미나’의 후속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터키는 산림을 이용한 소득작물 재배와 수목원, 산림휴양, 생태관광 등 산촌지역의 소득향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다루고 있다. 공동개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양측에서는 경북도와 터키 산림청과 관련된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합동실무진을 구성해 의향서 공동협력 실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71%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어 터키의 346종이나 되는 다양한 목재 이외의 산지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농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소득 작목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상남도,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 궤도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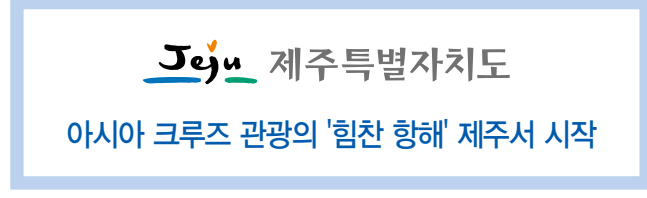


경상남도(이하 경남도)가 추진 중인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개발 사업이 사실상 본 궤도에 들어섰다. 경남도는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제프리 갯식 20세기 폭스 컨슈머 프로덕트 사장(미국), 그리고 팀 피셔 빌리지 로드쇼 테마파크 사장(호주)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착공식까지는 타당성 조사와 총괄개발자 선정, 특수목적법인설립 등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날 협약 체결로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전망은 3국 3자 대표들이 체결한 이날 협약의 역할분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20세기 폭스 컨슈머 프로덕트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단지 283만㎡내에 30만3000㎡ 이상의 테마파크를 영상체험 공간으로 개발키로 약속했다. 빌리지 로드쇼 테마파크는 폭스 컨슈머 프로덕트의 사업 구상에 맞춘 기획과 디자인, 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운영부문 사업을 맡기로 했다.

경남도는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8월부터 '테마파크' 전담조직을 설치해 두 회사와 투자자들이 테마파크 사업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매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아시아 크루즈 관광의 '힘찬 항해' 제주서 시작

아시아 크루즈 관광을 선도할 제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아시아지역 크루즈관광의 당면과제 해결과 발전 대안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은 지속 가능한 아시아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주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전시회와 국제적 조직의 연차총회 개최 등 교류의 장도 마련됐다. '아시아 크루즈관광의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규모 면에서 양적인 성장은 물론, 차별화된 시도를 통해 포럼의 질적 성장과 인지도 향상을 기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sia Cruise Leaders Network 이하 'ACLN')의 정식 발족과 제3차 크루즈산업육성협의회 회의 및 정부관계자와 선사 간 미팅이다.

지난해 제1회 포럼을 통해 제주도가 제안한 ACLN은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을 아시아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크루즈 선사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 리더들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족되며, 아시아 8개국 40여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한편 컨퍼런스 기간에 크루즈 전시박람회를 동시 개최하여 이번 포럼이 향후 크루즈산업 박람회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김익근 제주국제크루즈포럼조직위원장은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크루즈와 마이스산업을 융합한 창조관광으로서, 한국 크루즈산업을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제주 관광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발걸음이다." 라 말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토론에 강한 나라 프랑스, 주민 토론으로 공공갈등을 줄이다 CNDP 공공토론위원회 제도



글 김형진
(협의회 프랑스사무소 전문위원)



작년 발표된 한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갈등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나라는 종교 갈등이 심각한 터키로 갈등지수 1.27로 집계되었고, 우리나라 지수는 0.72로 전체평균 0.44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사회갈등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숙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셈인데, 수출과 산업개발, 경제개발을 통한 국가 소득증대에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극복의 노력을 병행할 때만이 경제성장의 효율성도 높이고, 진정한 의미의 일등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공공정책 결정에 앞서 주민참여와 토론을 통해 갈등소지를 사전에 줄임으로써 공공갈등이 극단적인 대립으로까지 치닫지 않도록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한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반으로 1997년 설립된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CNDP)가 바로 그것인데, 원자력발전소 설치, 철도건설, 공항, 항만 건설, 고압송전선 설비 같은 중요 국가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공공토론 과정을 의무절차로 법제화하고 이를 담당하는 독립행정 기구 CNDP는 지난 15년 남짓 프랑스 공공정책 결정에 있어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CNDP 설립 배경 - 공공정책 결정에 주민참여 필요성 대두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프랑스도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개발과 성장을 내세워 공공정책을 결정했던 이 기간 동안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대규모 국가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가와 기업, 주민, 각 사회단체 사이 갈등이 생겨났고, 1970년대 들어 환경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종전의 개발우선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정부와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공사계획 자체가 장기간 지연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지중해 노선 TGV 건설을 두고 5년 동안 건설부 장관 4명이 바뀔 정도로 사회, 정치적인 갈등이 심화된 바 있었고, 루아르 강 재개발 사업은 환경보호론자의 반대로 11개의 보 건설계획 중 3개가 취소되고 이미 건설되었던 2개의 보를 해체하는 사례까지 빚었다.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성찰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가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미리부터 형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잇따랐다.

마침내 1995년 “바르니에 법 Loi Barnier”이 제정되었고, 국익성 사업의 심의과정에 공공토론 형태로 대중의 참여 원칙을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바르니에 법이 정한 대중참여 장치로서 설립된 것이 바로 CNDP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이며 처음에는 환경개발부 산하기구로 1997년 발족하였으나 2002년부터 독립행정기구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CNDP의 지위 - 독립행정기구

프랑스 공공기구 중에는 정부예산으로 운영되지만 구성과 조직, 예산 등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기관을 독립행정기구 (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로 명명하고 있다. 1987년 처음 도입되어 2002년 법제가 강화된 독립행정기구는 상하 계층 간의 지휘와 감독을 통해 운영하는 전통적인 행정기구와는 달리 정부나 국회, 자치단체 등 모든 공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특정 분야의 조율업무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조직이다.

CNDP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조율이라는 업무분야를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구로서 대통령이 회장을 임명하지만 정부가 바뀌어도 중도 해임이 불가능하도록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전체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또한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대표자를 각각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CNDP 조직구성

회장단 (회장 1, 부회장 2)	대통령령으로 임명	임기 5년, 단임제, 중도해임 불가 국회 검증 필요
위원 (22명)	각 기구별 대표가 임명 (또는 지명) 공공분야 12명 민간분야 10명 임기 5년, 1회 연임가능 (소속기구 임기 종료 시 당연 해임)	하원 국회의원 1, 상원의원 1 지방자치단체 대표 6명 (지자체 협의제에서 지명 총리령 임명) 국가명의회 위원 1명 대법원 법관 1명 회계법원 법관 1명 행정법원 법관 1명 환경단체 대표 2명 소비자보호단체 대표 2명 건설, 교통 분야 전문가 2명 노조 대표 2명 기업 대표 2명
사무처 (7명)	사무총장 1, 간부직 3, 실무자 3	

CNDP 연간 예산

CNDP의 예산은 정부 공공예산에 속하지만,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부 정상예산 속에 독립계정으로 편성된다. 2011년의 경우 2,356,438유로(약 3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711,447유로를 지출하였고, 2012년은 2,396,251유로 예산에 1,582,612유로를 지출하였다.

CNDP의 기능

CNDP의 주요 활동은

-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대중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 참여방식을 결정하여 공공토론회를 조직
- ② 필요시 토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전문자료를 보충
- ③ 토론장에서 이해당사자와 일반대중이 골고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유지
- ④ 토론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업주체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이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 하는 데 있다.

CNDP의 중립성과 투명성

중립성은 CNDP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위원회가 토론 과정에 자체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CNDP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토론회를 조직하고 진행하지만 조직자의 역할만을 담당할 뿐 의견을 첨가하고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4~6개월간 공공토론을 진행한 후 토론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CNDP의 자체의견을 반영할 수 없고, 개선된 모든 의견을 침묵 없이 보고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종합 보고서는 사업 발주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모두 공개되게 된다.

공공토론회 조직 대상 사업

① 공공토론회 의무회부 대상

- 원자력 발전설비 신규 건설
- 사업비 3억 유로(약 4천억 원) 이상의 도로 건설
- 총 연장 40km 이상 철도건설
- 사업비 1억 유로 이상의 비행장 건설 및 확장
- 400kV 이상 총연장 10km 이상 송전선 설치
- 직경 500mm 이상 총연장 200km 이상 송유관 건설

② 기타 선택적 공공토론회 조직

- 사업비 규모로는 의무회부 대상이 아니지만 공익성 정도와 사업 영향력을 감안 발주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회, 지방의회, 사회단체에서도 신청 가능)
- 국가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사업

공공토론회 진행 절차



공공토론 진행상 특징

공공토론회 조직이 결정된 후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 자료를 수집한 뒤, 4개월에 걸쳐 토론회 일정을 수립한다.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을 경우 CNDP는 토론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토론회 개최 회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20~40회 정도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양한 의견 발표와 청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진행하는 데 있다. 사업 발주자가 계획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며, 이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계획폐지를 위해 항의하는 시위장이 돼서도 안 된다.

CNDP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서 중요해지는데, 아무리 작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진행해야만 한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아 찬반투표처럼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NDP는 맹목적인 찬성과 반대의사 발표에 대해서는 발언을 금하고 있다.

공공토론회는 정답을 제시하기 위해 조직한 자리가 아니며 사업 발주자를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모든 의견을 말하고, 듣고, 성찰하게 하는 자리이다.

결과 보고서와 구속력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침묵 없이 정리한 CNDP 종합보고서는 사업주체에게 통보되지만 이를 반영해야만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지속여부 및 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대중에게 발표하고 CNDP에도 통보하게 되는데, CNDP 측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공공토론회를 실시한 37개 사업의 경우 토론을 통해 제시된 대안을 선택한 사업이 15건이고, 사업내용을 수정한 경우가 11건, 원안 그대로 추진한 경우는 7건이었고, 나머지 4건은 사업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CNDP 토론은 양방향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토론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만든다. 원안을 변경한 경우가 70%에 달한다는 점을 볼 때, 토론 결과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을지라도 토론과정을 청취한 사업자는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당초의 추진계획을 변경할 만큼 공공토론회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다.

토론회 개최 비용 vs 갈등비용

토론회 1회 평균 1백만 유로(약 1천4백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 토론기간 만큼 사업 추진 역시 늦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회비용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CNDP 측 주장은 다르다. 1백만 유로가 더 들더라도, 사업기간이 1년 더 연장되더라도 보다 합리적인 수정안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공토론 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사업비 10억 유로와 4~5년 공사기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이보다도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로 인한 피해는 더욱더 심각할 것이다. 토론은 바로 선진 민주사회가 지향해야할 정책 결정의 과정이다. 좀 더 디지안 확실하게,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의 근간을 CNDP가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2013년 개최 공공토론회 및 비용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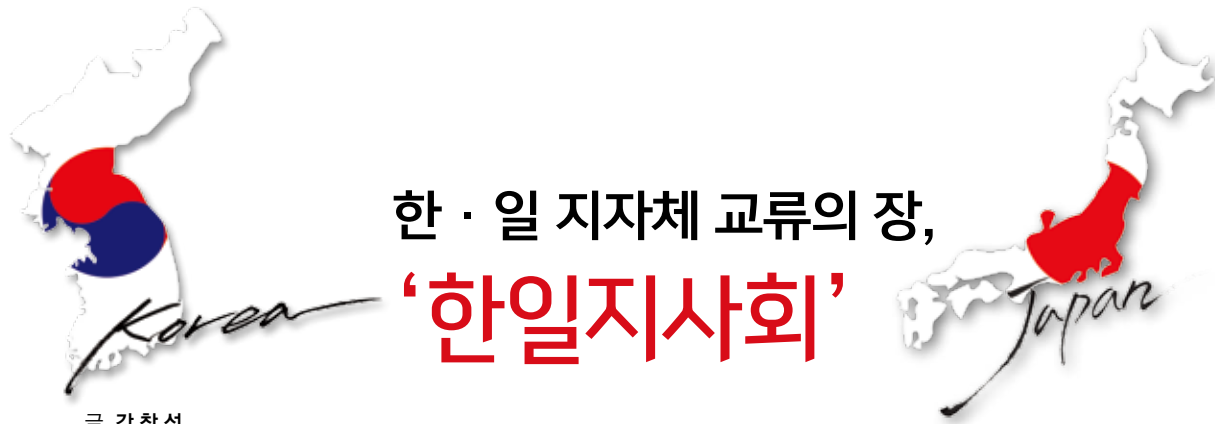
사업 내역	총 사업비 (백만유로)	토론비용 (유로)			사업비 대비 토론비용(%)
		발주자 부담	CNDP 부담	토론비 총액	
프랑스 럭비협회 경기장건설	600	978,118	33,649	1,011,767	0.17
Etrez시 - Voisines시 천연가스관 건설	605	1,118,940	48,900	1,167,840	0.19
Saint-Avit시 - Tersanne시 천연가스관 건설	400	1,118,940	48,900	1,167,840	0.29
Meuse시 핵폐기물 처리 및 대심 저장시설 건설	미통보	1,218,000	52,900	1,127,900	-
Saint-Brieuc만 해상 풍력발전 시설 건설	2,000	888,000	100,300	988,300	0.05
Saint-Nazaire 해상 풍력발전 시설 건설	2,000	716,000	92,000	808,000	0.04
Courseulles-sur-Mer 해상 풍력발전 시설 건설	1,800	776,000	64,000	840,000	0.05
Fecamp 해상 풍력발전 시설 건설	2,000	698,000	34,700	732,700	0.04
Lyon시 우회 고속도로 노선건설	2,350	1,276,000	80,500	1,356,500	0.06
Port-la-Nouvelle 항구 확장건설	200	635,000	60,300	695,300	0.35
평균	1,328	938,320	61,615	1,003,042	0.12



공공사업에 있어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다 있다. 단지 그 갈등을 흡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이 구분될 것이다. 갈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후진국 행정에 머물 것이고, 갈등 당사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간다면 선진국 행정이 될 것이다.

소통은 양방향으로 전제로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정책결정 과정에 여론 수렴을 중시하는 여러 노력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사업 검토 단계부터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관점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갈등을 미리부터 줄일 수 있는 프랑스 공공토론회 CNDP와 같은 소통과 성찰의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글 강창석
(협의회 기획홍보부)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웃국가 일본은 국가 교류와 협력에 있어 동반자적 입장에서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국 지자체 교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지 모르나.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와 함께 창설된 한일지사회는 양국 간의 지자체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간 보완점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99년부터 한일지사회 간 합의에 따라 격년제로 개최해 온 한일지사회는 양국 지자체 간 지방분권 및 교류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의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

해 그간의 역사문제나 영토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양국 관계가 우호 협력 관계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21세기 국가경영에 있어 새로운 경향의 패러다임이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중앙에서 지방중심으로 행정 시스템이 전환되는 추세와 국제관계 있어서도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한일 양국 지사들이 양국의 지방분권과 자치단체 간 교류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협의함으로써 양국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일지사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참가대상은 한일 64개 시·도지사로 한국은 17개 광역 시도지사, 일본은 47개 시도부현지사이며 현재까지 한국에서 2회, 일본에서 2회 개최된 바 있으며 제5회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비용은 개최국에서 회의비용과 체재비 일체를 부담하고 참가국은 항공료만 부담하며 지사회의, 정부요인 방문, 공동 발표문 채택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최근 들어 독도 문제, 과거사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는 것은 몹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일본은 기술력, 투자력, 국제기구 공헌도 등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교류상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중대일로에 있는 중국의 영향력 견제와 북한 문제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양국 간의 갈등 관리는 필수적이다.

다행스럽게도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회의는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18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제22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20일 대구에서 제14회 한일 경제교류 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비록 양국 중앙정부 간 관계는 경색되어 있을 지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양국 지사회에서도 제5회 한일지사회의 연내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제5회 한일지사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증진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한일 양국의 지방정부 간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회의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

한일지사회의란?

한국과 일본이 격년제로 개최해 온 회의로서 양국 지자체간 지방분권 및 교류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

창립배경

1998년 2월

김대중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일본 전국지사회장이 한·일 시도지사 간 교류 제안

1999년 1월

우리나라의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양국 지방 정부간 교류증진 및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창립

역대개최국

구분	개최국	기간	주제
제1회	일본	99. 11. 8 ~ 11. 12	한일교류의 확대 및 지방자치의 발전
제2회	한국	02. 11. 16 ~ 11. 19	한일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촉진
제3회	일본	04. 9. 1 ~ 9. 4	한일관광, 문화 교류협력
제4회	한국	08. 4. 9 ~ 4. 11	일, 지방분권의 현황과 전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제30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 27일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여 민선 6기 중점 추진과제 및 당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5월 14일에 있었던 국제화 우수 사례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최우수상으로는 경기도 고양시, 우수상에는 서울 송파구와 부산 해운대구, 장려상에는 인천광역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연천군이 수상했으며, 시상은 협의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선 6기 중점 추진과제로 ▲지방자치제도 개편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 국정 참여 및 위상 강화를 주제로 논의했으며, 당면 주요 현안으로는 ▲기초연금 국가 책임성 강화 ▲지방 소방재정 확충 ▲지특회계 개편 대응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 ▲제5회 한일지사회 개최 ▲호주·영국 해외사무소장 파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 구현의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를 제안하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금 지방재정부담 경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 소방재정 확충, 지역발전 특별회계 합리적 개편, 중앙-지방 재정부담 협의제도 마련 등이다.

이번 성명서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만큼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와 중앙 정부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해 본다.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

한·중·일 지자체 간 교류를 대표하는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컨벤션센터 구미코에서 개최되었다. '인문교류 확대를 통한 한·중·일 교류 활성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국내외 500여 명이 참석하여 3개국 이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첫날 저녁 호텔금오산에서 이시종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충청북도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남유진 구미시장의 환영사, 평원구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과 오카모토 다모쓰 자치체국제화협회장의 축사로 회의의 첫 문을 열었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둘째 날은 이인선 경상북도 정부부지사, 동평명 저장성 이우시 부시장, 사토미 스스무 나가사키현 부지사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부제 발표가 있었다. 각 세션은 '지방정부 국제행사 상호참가 확대를 통한 관광·문화교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통상교류 확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폐회식에서 남유진 구미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류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구미성명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삼성전자, 포스코, 안동 하회마을, 불국사,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석사 등을 시찰하며 모든 일정을 마쳤으며, 다음 17회 회의는 중국 이우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지역발전을 위한 MOU 체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9월 22일 YTN 청사에서 이시종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충청북도지사)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조충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 연구 ▲지방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 개최 ▲기타 행복한 지방자치 환경 조성 등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시종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및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행복한 지방자치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시종 회장은 협약식 후 YTN과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방세계 개편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8회 지방공무원 외국어스피치대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9월 13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지방공무원의 외국어학습의욕 고취 및 지방의 국제화 인력양성을 위한 '제8회 지방공무원 외국어스피치대회' 본선대회를 성황리에 개

최했다. 이번 대회는 예선 (FLEX 말하기 시험)에서 선발된 70명(영 30명, 일 20명, 중 20명)의 본선 진출자가 개인발표와 조별토론(약 20분)을 통해 그 동안 갖고 닦은 외국어 스피치 능력을 겨뤘다.

대회 심사위원을 맡은 원어민 교수들은 대회 하루 전에 공개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상호토론을 펼치는 등 탄탄한 외국어 능력을 보유한 지방공무원이 이토록 많다는 사실에 감탄했다며 심사평을 밝혔다.

본선 대회의 당선자로는 영어부문 유정화(세종), 조 현(전남), 임상우(부산 남), 정승원(전북 전주), 소은선(부산 금정), 일본어부문 박수영(서울 서초), 김나나(전남 여수), 김지혜(경기 오산), 중국어부문 석로태(충남 아산), 이선심(경기 수원), 이봉학(서울 서대문) 등이 입상했다. 언어권 별 수상자들에게는 해당 언어권 해외연수의 특전이 주어진다. ④

대학생 SNS 홍보단 3기 해단식 및 4기 발대식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지방분권 대학생 SNS 홍보단 3기 해단식 및 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해단식에서는 3기 학생들의 조별 홍보 프로젝트 추진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동안 활동을 바탕으로 우수조직상과 우수 활동자 상을 진행했다.

4기 발대식에서는 협의회 김홍환 위원의 '재정분권의 의의와 필요성', 윤태웅 위원의 '지방분권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후 3기 멘토들과 함께 조별 미션과제 및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학생 SNS 홍보단은 쌍방향 미디어를 활용하여 대국민 소통력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이다. ④

유령이 나타났다고, 글래미스 성

• 작품명: 글래미스 성(Glamis Castle) • 영국 스코틀랜드 / 14세기경

영국 스코틀랜드 동부 앵거스에는 14세기경에 건축된 거대한 성 글래미스가 있다. 원뿔 형태로 치솟은 탑과 붉은 사암으로 된 흉벽은 보는 사람들을 압도하게 한다. 왕실의 사냥 별장이었던 이 성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의 배경으로도 등장해 수백여 년 간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글래미스 성은 그 무엇보다 브리튼 섬에서 가장 저주받은 성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저주의 시작

글래미스 성은 브루스 가(家) 로버트의 손자 로버트 2세가 1372년 이곳과 영지를 사위인 존 라이언 경에게 주었다. 라이언 가(家)는 포트비스트에 본가가 있는데, 그 본가에는 가문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잔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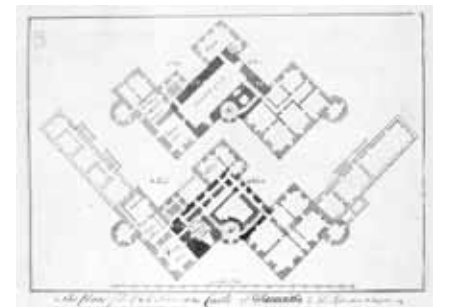
가문의 전설에 의하면 누구라도 그 잔을 저택 밖으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도 존 라이언 경은 국왕의 부마가 되며 결혼선물로 받은 글래미스의 영지로 이 잔을 가지고 가기로 하면서 가문의 저주에 도전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글래미스 성으로 잔을 옮긴지 11년만에 존 라이언 경은 결투 중에 사망했고, 6대 영주의 부인이 마녀혐의로 화형을 당하고, 7대 영주의 아들이 오랜 가문의 숙적인 린제이 가의 패거

리와 다투다 목숨을 잃는 등 수 백 년이 지나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유령 목격담까지 가세하면서 저주받은 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숨겨진 통로, 비밀의 방

글래미스 성은 몇 개의 방이 존재하는지, 어떤 통로가 성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성으로도 유명하다. 비밀의 방 내부에 대해선 여러 가지의 전설이 존재하는데 가장 유명한 전설은 1821년 10월, 성주의 부인이 흥취한 물골을 한 남자아이(요즘 와서는 다운증후군이라고 추정된다)를 낳은 것을 감추기 위해 비밀의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아이를 가두어 길렀다는 것이다. 평생을 그 안에 살며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죽음을 맞아 그 혼령이 지금도 성 안에 머물러 다닌다고 한다.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폴 블룸필드는 글래미스 성의 저주와 비밀에 대해 유령에 의한 것이 아닌 이 가문이 진짜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눈에 띄는 백작의 유령과 백작 부인의 유령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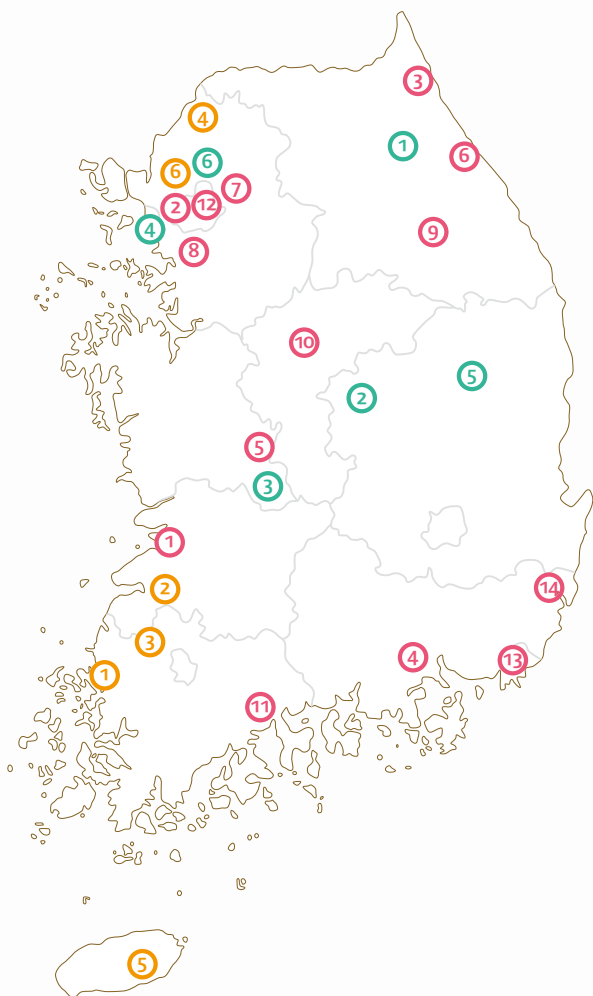
세계 곳곳의 고성에도 유령 목격담이 나오고 있으니 글래미스 성처럼 분위기와 전통이 역사적인 이 곳에서 몇몇 유령이 출몰하다 해도 그리 이상할 건 없을 것이다. ④





가을의 정취 따라 시도의 맛과 멋을 즐기는 가을 축제

가을 여행 지침서, 대한민국 가을 축제 로드맵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 한층 높아지고 푸르게 변한 하늘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한다. 낭만과 사색으로 대변되는 가을이지만 그래도 가을이면 가장 떠오르는 건 오색 빛으로 물든 단풍나무와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음식들이 아닐까.

시도뉴스레터 가을호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가을의 맛과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 소식을 준비했다. 가을을 몸에 품고 시원한 바람과 단풍의 아름다움,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전국 시도의 가을 축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 9월 축제

- ① 평창효석문화제 | 9. 5 ~ 9. 14
- ② 문경 오미자축제 | 9. 19 ~ 9. 21
- ③ 금산인삼축제 | 9. 19 ~ 9. 28
- ④ 인천 드림파크국화축제 | 9. 20 ~ 10. 5
- ⑤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 9. 26 ~ 10. 5
- ⑥ 남양주 다산문화제 | 9. 27 ~ 9. 28

● 11월 축제

- ①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 10. 25 ~ 11. 10
- ② 정읍사문화제 | 10. 31 ~ 11. 2
- ③ 장성백양단풍축제 | 10. 31 ~ 11. 2
- ④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 10. 31 ~ 11. 2
- ⑤ 제주 최남단방어축제 | 11. 6 ~ 11. 9
- ⑥ 파주장단콩축제 | 11. 21 ~ 11. 23

● 10월 축제

- ① 김제지평선축제 | 10. 1 ~ 10. 5
- ② 하이서울페스티벌 | 10. 1 ~ 10. 5
- ③ 양양송이축제 | 10. 1 ~ 10. 5
- ④ 진주남강유등축제 | 10. 1 ~ 10. 12
- ⑤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 10. 2 ~ 10. 5
- ⑥ 강릉 커피축제 | 10. 2 ~ 10. 5
- ⑦ 구리 한강코스모스축제 | 10. 3 ~ 10. 5
- ⑧ 수원화성문화제 | 10. 8 ~ 10. 12
- ⑨ 정선아리랑제 | 10. 9 ~ 10. 12
- ⑩ 음성 품바축제 | 10. 16 ~ 10. 19
- ⑪ 순천만갈대축제 | 10. 17 ~ 10. 19
- ⑫ 서울역새축제 | 10. 18 ~ 10. 27
- ⑬ 부산세계불꽃축제 | 10. 24 ~ 10. 25
- ⑭ 울산옹기축제 | 10. 24 ~ 10. 26

가을 축제, 이곳을 주목하라!

평창효석문화제

생애 단 한 번의 아름다운 사랑,故이효석 작가의 대표작인「메밀꽃 필 무렵」의 작품 배경지인 봉평에서 열리는 평창효석문화제는 자연과 문학이 함께하는 축제로 메밀과 소설의 내용을 담은 다채로운 행사로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백일장을 비롯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과 소설 속에 등장하는 메밀꽃밭 둘러보기, 봉숭아 물들이기 등의 자연 프로그램,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다채로운 감동과 재미가 있는 평창효석문화제 속으로 떠나보자.

기간 | 9월 5일 ~ 9월 14일 장소 |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문화마을 일원



문경오미자축제

조선시대 각종 기록에 의하면 문경은 우리나라의 오미자 주산지이자 특산물로 수록되어 있다. 문경 오미자는 해발 300m의 청정환경에서 친환경 재배기술로 생산함으로써, 맛과 향기 그리고 품질이 타지역산과 차별화되는 전국 최고의 명품 오미자로 주목 받고 있다. 올해 개최될 문경오미자 축제에서는 체험, 공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붉은 빛 넘실대는 문경오미자축제에서 건강에 유익한 오미자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담아보자.

기간 | 9월 19일 ~ 9월 21일 장소 | 경북 문경시 오미자문화복지센터 일원

금산인삼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금산인삼축제는 198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특산물 축제의 대명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 최우수 축제이다. 금산의 전통문화와 인삼, 약초, 인간 건강이라는 아이템을 결합하여 다른 축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테마를 가진 축제로 웰빙 시대에 맞는 건강체험 중심의 이벤트와 금산인삼관, 야생화전시, 건강체험관으로 이뤄진 전시 및 체험공간까지 인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금산인삼축제에서 오감 만족 건강여행의 진수를 느껴보자.

기간 | 9월 19일 ~ 9월 28일 장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인삼관 및 인삼, 약초거리 일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가 즐기고 싶다면 이곳은 어떨까.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열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다. 탈춤축제는 안동문화를 답사하는 것과 축제의 신명을 함께하는 것이 태극처럼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 '두근두근 사자'를 테마로 다양한 탈춤공연과 무대공연 그리고 체험이벤트가 함께 공존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국내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올라올 신명 나는 탈춤의 매력 속에 한번 빠져보자.

기간 | 9월 26일 ~ 10월 5일 장소 | 경북 안동시 탈춤공원, 하회마을 일원



하이서울페스티벌

하이서울페스티벌은 거리예술축제다. 도시와 사람, 예술이 만나 새롭게 창조하는 세상에 없는, 세상이 꿈꾸는 거리 축제의 향연으로 서울의 자유로움과 서울이 품고 있는 한국 전통문화가 어우러져 그 멋과 재미를 전한다. 올해는 '길에서 놀자'를 테마로 세계 7개국 49개 거리예술단체의 공연과 주제공연, 폐막 난장 외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의 멋과 거리의 즐거움을 도시에 전할 예정이다. 도심과 예술, 사람을 이어주는 길을 만들어줄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찾아 거리축제의 즐거움을 한껏 만끽해 보자.

기간 | 10월 1일 ~ 10월 5일 장소 | 서울 중구 서울광장 등 도심일원



진주남강유등축제

진주에서 남강에 띄우는 유등놀이는 우리 겨레의 최대 수난기였던 임진왜란의 진주성 전투에 기원하고 있다.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7만 병사와 사민의 매운 열과 닳을 기리는 행사로 세세연년 면면히 이어져 오늘의 진주남강유등축제로 자리 잡았다. 진주남강유등 축제에서는 유서 깊은 천 년의 강변에서 아름다운 유등을 직접 감상하며, 등에 얹힌 역사적인 이야기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교감할 수 있는 다양화 문화행사를 체험할 수 있다. 이번 가을, 조상들의 조국애와 지혜가 묻어 있는 유등놀이를 함께 체험해보자.

기간 | 10월 1일 ~ 10월 12일 장소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및 남강 일원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대한민국에 와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있다. 바로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 최대의 와인 관련 행사이며 아시아 대표 와인행사로 '와인, 문화와 비즈니스로 만나다'라는 주제로 해외와인, 국내와인 및 전통주, 음식, 와인소품 등 총 330 부스의 규모로 전시된다. 이와 함께 체험, 학술, 공연, 아시아 최대 품평회인 아시아 와인트로피가 함께 진행돼 와인지식공유의 장이 될 것이다. 낭만의 계절 가을, 와인의 묘한 매력을 함께 경험해보자.

기간 | 10월 2일 ~ 10월 5일 장소 | 대전 유성구 무역전사관, DCC, 엑스포한빛광장 등 일원



음성 품바축제

궁핍했던 시절 풍자와 해학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 선조들의 얼을 되새기고, 꽃동네 설립의 계기를 마련한 거지 성자 최귀동 할아버지의 숭고한 인류애와 박애 정신을 기리는 음성 품바축제가 올가을 개최된다. 역대 품바 왕중왕전, 천인의 옛치기, 천인의 비빔밥, LOVE 품바 페스티벌 등 다양한 체험, 전시 행사가 열려 품바 특유의 흥과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품바와 함께하는 색다른 경험으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즐거움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자.

기간 | 10월 16일 ~ 10월 19일 장소 | 충북 음성군 설성공원



장성백양단풍축제

산과 물 인간의 역사가 조화를 이룬 곳 '전남 장성'에서 애기단풍의 아름다움과 백양사의 절경이 어우러진 오색빛깔의 향연, 백양단풍축제가 개최된다. 노령의 정기를 담은 백암산의 기암괴석과 천연기념물인 비지나무 숲 속의 천 년 고찰 백양사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오색단풍의 절경을 감상하고 전국단풍등산대회와 전시, 체험, 판매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할 예정이다. 올가을 진정한 단풍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백양사로 떠나보자.

기간 | 10월 31일 ~ 11월 2일 장소 | 전남 장성군 백암산 백양사 일원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전곡리인들이 돌아왔다!" 구석기문화와 선사문화를 교육, 놀이, 체험 등을 통해 배우고 즐기는 구석기축제는 연천 전곡리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구석기시대를 그대로 재연한다. 구석기힐링캠프, 세계구석기체험마을, 구석기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올해도 어린이를 동반한 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잡아당길 예정이다. 그들이 가기 좋은 가을, 자녀와 함께 구석기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기간 | 10월 31일 ~ 11월 2일 장소 | 경기 연천군 전곡리 유적 및 전곡읍 일원



제주 최남단방어축제

제주 바다의 대명사인 방어를 테마로 한 '최남단 방어축제'는 매년 15만 ~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제주의 대표적 해양문화축제다. 다양한 방어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각종 방어낚시, 현장 방어경매, 손으로 방어 잡기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뤄 가족이나 단체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가 있다. 단순히 먹고 즐기는 축제에서 나아가 낚시체험까지 즐길 수 있다. 제주도의 역사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최남단방어축제에서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

기간 | 11월 6일 ~ 11월 9일 장소 | 제주 서귀포시 모슬포항 일원



파주장단콩축제

가을이 깊게 무르익어 가면 파주 임진각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웰빙축제로 자리매김한 파주장단콩축제가 열린다. 파주장단콩은 예로부터 맛과 영양이 뛰어나 임금님께 진상되던 콩으로 20세기 초에는 우리나라 콩 장려품종으로 뽑혀 전국에 보급되기도 했다. 파주 장단콩축제는 '관광객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 파주장단콩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및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풍요의 계절 가을, 온 국민의 건강식 '장단콩'과 함께 웰빙여행을 즐겨보자.

기간 | 11월 21일 ~ 11월 23일 장소 | 경기 파주시 임진각광장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구나! 다채로운 우리나라 추석 음식

추석은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와 높고 맑은 하늘, 풍성한 햇곡식과 과일, 밤하늘에 둥글게 떠오르는 달과 함께 1년 수확을 감사해하는 풍요로운 우리네 명절입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맞으며 멀리 흩어져 있던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송편을 빚으며 그간의 정담을 나누면서 가족의 건강과 수확의 기쁨을 확인하는 뜻을 가진 명절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보냈으므로 '1년 열두 달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이렇듯 소중한 명절에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려낸 차례상 차림을 함께 해 온 추석 음식이 있기에 더욱 즐겁고 의미가 깊습니다.



글 윤인자 교수
(고려직업전문학교)

지역 특색만큼 다양한 전국 추석 음식

추석 차례상차림에는 그 해 추수한 햅쌀로 빚어낸 송편과 토란탕, 갖가지 재료를 이용해 만든 적(炙), 전(煎), 포(脯), 나물, 사과, 배, 수정과, 다식 등이 정갈하게 차려 올립니다. 이 상차림에서 기본적으로 차려지는 음식의 구성은 비슷하지만 각 지방에서 나오는 음식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추석 음식은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이로움이 가득한 중부의 맛

조선시대부터 한양을 포함한 중심지역이었던 서울·경기 지역은 전국에서 오는 모든 물자가 집결되는 곳인 만큼 어느 특정 지역 재료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특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예부터 통복어를 구이적으로 올립니다. 복어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기며 중요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녹두를 갈아 배추를 넣고 부쳐낸 녹두전이나 생선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굴비를 차례상에 올립니다. 최근에는 참조기도 상에 많이 올리고 있으며 갈비찜도 빼놓지 않고 해먹는 음식입니다.



대부분이 산간지역인 「강원도 영서지역」은 산나물과 감자를 이용한 음식이 많았습니다. 특히 메밀꽃으로 유명한 평창은 차례상에 메밀떡은 반드시 올리며 감자전이나 배추와 무를 이용한 적을 올리기도 합니다. 버섯류도 부침이나 전에 즐겨 사용되었으며 특히 송이 같은 귀한 버섯은 소적으로 구워내어 상에 올리기도 합니다. 어물이 많이 나는 「강



원도 영동지역에서는 육적, 어적, 돈배기적, 누름적, 메밀적을 올립니다. 어적으로는 어물찜(생선 찜)을 올리기도 하는데 어적 위에는 통째로 삶은 문어를 떠 상에 올리며 즐겨먹는 음식입니다.

「삼도가 인접한 충청도」에서는 다양한 제물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리적으로 삼면이 육지이고, 한 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어서 농산물과 해산물이 풍부하여 고품음식이 발달하고 음식에 해산물을 많이 이용합니다. 경북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대구포, 상어포, 오징어포, 가오리포, 피문어 등을 올리고, 전라도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흥어, 병어, 가자미, 낙지 서대묵 등을 올립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지역에서는 배추전, 무적 등과 같은 전과 부침 등이 추석에 즐겨먹는 음식입니다.

바다의 푸른 향 가득한 남도의 맛

「풍요로운 전라도」 추석 차례상에 절대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지역특산물인 흥어입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음식이어서 차례상뿐만 아니라 큰 잔치상에도 어김없이 올라갑니다. 지역에 따라 흥어를 회부침이나, 찜을 해서 상에 올립니다. 또한 병어와 낙지, 꼬막과 같은 어패류도 전라도에서 즐겨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추석 상차림에 오르는 단골 음식입니다.

「바다와 육지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경상도」는 지역 특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경북지역에는 참상어살을 구워서 적으로 올리며 이를 대구사투리로 돔배기라 부릅니다. 안동지역에는 차례상에 안동식혜가 꼭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다를 가까이 두고 있는 경남지역에서는 가자미, 방어, 도미 등의 생선과 조개 등의 어물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선포나 북어포만 올리지 않고 대구포, 가오리, 피문어 등도 함께 상에 올려 추석 음식으로 즐겨먹습니다.

「섬 지방인 제주도」는 수확되는 농산물이 육지와 달라 상차림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제주에서만 잡히는 옥돔 같은 생선과 전복 등을 차례상에 올립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의 특산물인 파인애플과 같은 열대 과일도 올린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된 때에는 못 구할 농수산물도 없다 하지만 예전에는 육지에서 흔한 밤, 대추가 제주도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차례상에 올리지 않는 것이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추석 음식의 영양은 어떻게?

추석 차례상은 영양학적으로 아주 완벽에 가깝습니다. 송편의 탄수화물, 고기와 생선의 단백질, 국물재료에 쓰이는 다시마의 칼슘, 전과 적에서는 지방이 있으며, 제철과일에는 풍부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추석 음식은 모두 제철 재료를 사용한 음식들이라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고, 5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져서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은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추석의 대표음식 송편은 맵쌀을 주재료로 하고 그 속에 소로 깨, 콩, 밤 등의 견과류가 들어가서 탄수화물과 함께 부족할지 모르는 단백질과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을 상호보충해줍니다. 토란탕의 토란은 추석 전후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영양이 많고 맛도 좋습니다. 토란국은 한방에서는 뱃속의 열을 내리게 하고 위와 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매에 비해 씨가 커 왕을 상징하는 대추는 쇠약한 내장의 기능을 끌고 루 회복시키고 전신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신경을 안정시켜 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한 송이에 씨알이 세 톨이 들어 있어 3정승을 상징한다는 밤은 당질, 단백질, 지방,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 등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 있는 완벽한 식품으로 병을 앓고 난 사람이 나 노인에게 적합한 영양식품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감기, 빈혈 예방은 물론 피부 미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을의 상징인 감은 저항력 증강과 고혈압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 잎으로 차를 끓여 꾸준히 마시면 비타민C의 작용으로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며, 설사를 멎게 하고 배탈을 낮게 해줍니다.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사과도 수분이 90%를 이루고 펙틴이라는 성분이 배변촉진, 혈당조절 기능이 있어 대장암예방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와 함께 빠지지 않는 과일인 배는 해열작용이 있어 열에 의한 여러 가지 증세들을 완화시키며 술독을 풀어주고 갈증을 해소시키는 데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의 전통 추석 음식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말 그대로 '웰빙음식'입니다. 그리고 재료에 있어서도 우리 땅에서 난 우리의 것을 이용해야 제대로 된 '웰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직접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추석을 맞아서 몸에도 좋고 농민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신비로움을 품은 가을 정취’ 속으로
청풍명월 고장, 충북 제천

의림지



글, 사진 **허주희** (여행 작가)
 사진 제공 **제천시청 문화관광과**

소슬바람이 솔솔 불어오니, 어느새 가을이다.
 잔잔한 호수에 드리워진 붉은 빛 나무와 갈색 벤치가 어울리는 계절.
 조용히 사색하면서 한가로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어디 없을까.
 수려한 산줄기와 봉우리가 쪽빛 호반을 감싸 흐르는 곳,
 고즈넉한 가을 정취가 한 자락 여운으로 남는 곳,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 제천이다.
 이 가을을 가장 '가을답게' 느끼고 싶어 길을 나섰다.

하늘과 호수가
 맞닿은 곳에 있으니
 신선이 된 듯
 마음이 들뜬다.

가을은 유난히 '바람'을 타게 한다. 떠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여행 바람'. 소슬바람 맞으며 호숫가를 걷거나 벤치에 앉아 사색에 빠지는 계절 가을이 왔다. 가을이 깊어 가면, 산하(山下)는 마법을 부리듯 온통 붉은 색채로 물들어 간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일컫는 '청풍명월(淸風明月)'은 마음속의 찌든 때까지 씻어주고, 어둠을 밝히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해 준다. 파란 호수에 투영된 가을빛이 가슴에 잔잔하게 투영된다. 그저 서 있기만 했을 뿐인데, 온갖 잡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맑은 기운이 감싸 흐른다. 산과 호수가 두 팔 벌려 여행자를 환영하듯, 제천에는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감동과 울림이 있다.



청풍호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노래하는 곳 '청풍호'

하늘과 호수가 맞닿은 곳에 있으니 신선이 된 듯 마음이 들뜬다. 깊은 산과 계곡에 둘러싸인 천혜의 지형에 자리 잡은 청풍호는 제천의 대표적인 명소다. 탁 트인 청풍호 주변으로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고 고요한 정취에 푹 빠진다. 파란 하늘과 호수, 붉은 산자락이 빚어내는 풍광에 넋을 놓는다. 그림처럼 자리 잡은 청풍호와 붉게 물든 산이 한데 조화를 이루며 한 폭의 아름다운 수묵화를 보는 듯 아름답다.

청풍호는 충주 다목적댐 건설로 생성된 호수로, 뱃길 130리 중 볼거리가 가장 많고 풍경이 뛰어난 '내륙의 바다'다. 지금 청풍호 주변에는 청풍문화재단지를 중심으로 봉황이 호수 위를 나는 형상의 비봉산과 기암괴석이 즐비한 금수산, 그리고 마의태자의 역사가 깃든 월악산이 고즈넉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청풍호 주변을 도는 유람선은 빼어난 풍경을 두루 감상하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속세를 벗어나는 듯, 유유히 흘러가는 유람선 위에서 가을이 선사하는 낭만과 운치에 몸을 맡긴다.

고색창연한 '청풍문화재단지'와 '의림지'에서 고즈넉한 정취 만끽

청풍면 망월산 기슭에 자리한 청풍문화재단지에 오르면 청풍호가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대자연이 옛 문화를 만나니, 고풍스러운 운치가 극에 달한다. 청풍문화재단지에 오르면 주변의 빼어난 자연 경관과 함께 옛 문화재를 접할 수 있다. 이곳에서 마주하는 목조와 석물, 나무와 이끼 낀 돌부리에서 역사와 자연의 감동이 가슴 속에 따스하게 스며든다.

청풍문화재단지는 주변의 빼어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우리 옛 문화재를 접하면서 더불어 역사적 의미와 풍류를 느낄 수 있다. 한가로운 정취 속을 거닐다가, 발길을 돌려 '의림지'로



청풍문화재단지

향한다. 제방을 따라 늘어 선 소나무와 벚나무들이 여행객을 반기는 듯하다. 이곳은 순조 7년에 세워진 영호정과 1984년에 건립된 '경호루', 그리고 수백 년을 자란 소나무와 수양버들이 가을의 운치를 더해 준다.

또한 제천에 오면 해발 531m 비봉산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도 즐길 수 있다. 정상까지 관광모노레일을 타고 20분 정도 올라가면 비봉산 정상, 활공장이 나오는데, 발 아래로 펼쳐지는 청풍호 풍광이 가슴 시리도록 아름답다. 숲 속의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으로 올라갈 때는 기대와 설렘으로 즐거웠다면, 내려올 때는 속도가 붙다 보니 재미와 스릴을 경험한다.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이 깃든 '박달재'

제천하면, '박달재'도 빼놓을 수 없다.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옛 노래로도 유명한 박달재는 해발 453m에 위치한 고개로, 제천시 봉양읍에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박달재는 젊은 선비 박달과 처녀 금봉의 애절한 사랑이 전해져 오는 곳으로 박달과 금봉의 묘, 전망대 등 다양한 테마 공원으로 꾸며져 있다. 두 남녀의 조형물과 '박달재 노래비'도 세워져 있다.

동선을 따라 박달재를 걷다 보면, 두 젊은 남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 아련하게 전해져 온다. 제천에는 이밖에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성지, 배운성지를 비롯해 스릴만점 번지점프를 즐기는 청풍랜드, 서바이벌 등 각종 산악시설을 즐기는 산악체험장,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솟은 솟대들의 향연을 즐기는 능강 솟대문화공간 등 다채롭게 보고 즐기는 곳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한방명의촌에서 진료 받으며 '진정한 휴양' 명소 체험

제천은 '건강 도시'를 표방하며, 도시인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을 다지고 요양하면서 하룻밤

박달재를 걷다 보면,

두 젊은 남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

아련하게 전해져 온다.

수려한

자연풍광과 함께

건강과 휴양까지

동시에

즐긴 셈이다.

편히 묵을 수 있는 한방명의촌과 명암산채건강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한의사가 상주하는 한방명의촌에서 간단한 건강진단과 진료를 받고, 옆에 자리한 명암산채건강마을 황토펀션에서 하루 묵었다.

황토가 우리 인체에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이곳의 건강 프로그램에 맞춰 자신의 사상 체질과 건강을 체크하고 명상과 마사지 등으로 피로를 푸니, 심신이 더없이 평화롭고 정화되는 기분이다. 밤에 황토 방에 누우니, 노곤했던 몸이 풀리며 스르르 잠에 든다. 다음 날, 약초로 만든 약선 요리 및 보양 음식을 먹으며 원기를 회복한다. 수려한 자연 풍광과 함께 건강과 휴양까지 동시에 즐긴 셈이다.



제천 한방명의촌 외부

'건강도시' 제천의 매력 체험하는 '201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열려

제천은 오래 전부터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산간지방에서 채취해 생산되는 우수한 한약재의 집적지로 발전해 왔다. 매년 가을, 한방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보고 체험하는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가 열린다. 올해 '201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양암동 소재 한방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한 자리에서 전시, 교역, 이벤트, 학술, 체험, 휴식, 축제 등 한방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맛보고,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야말로 한방 특화도시로서 '제천'만의 건강하고 특색 있는 면모와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가을이 선사하는 여유와 고즈넉한 정취를 느끼고 몸과 마음을 제대로 충전하고 싶거든, 주저 말고 충북 제천으로 떠나보자. 🍂



모노레일



비봉산활공장



산악체험장



문화재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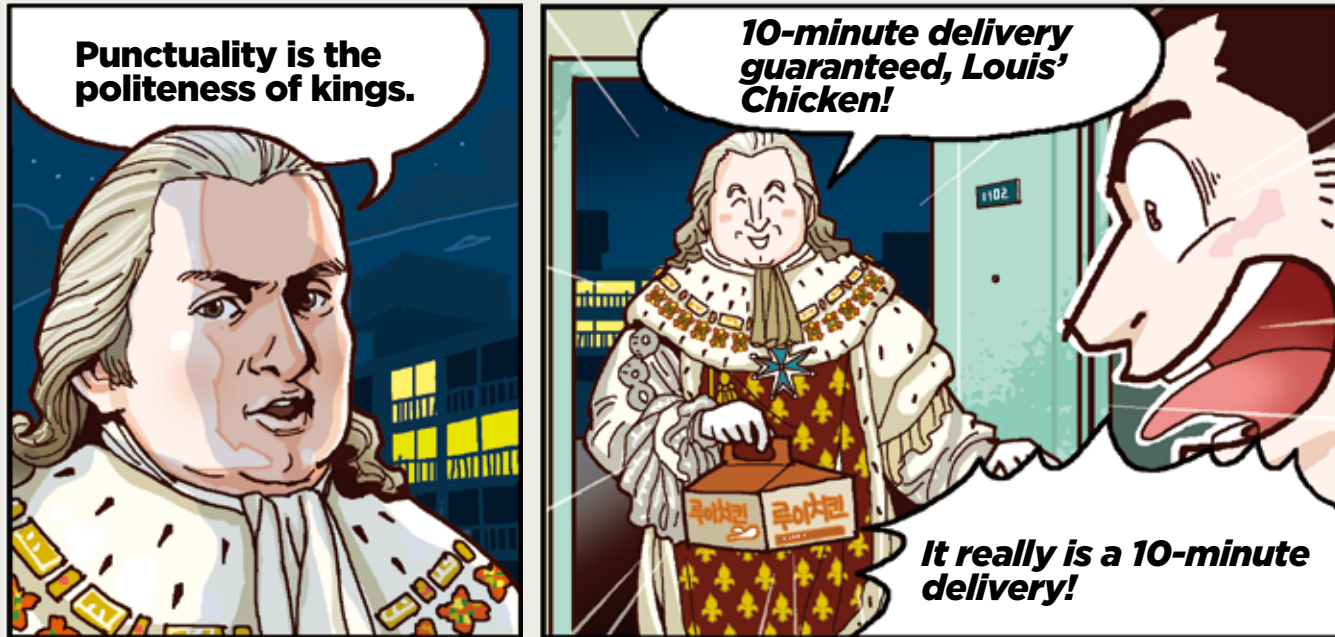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Punctuality is the politeness of k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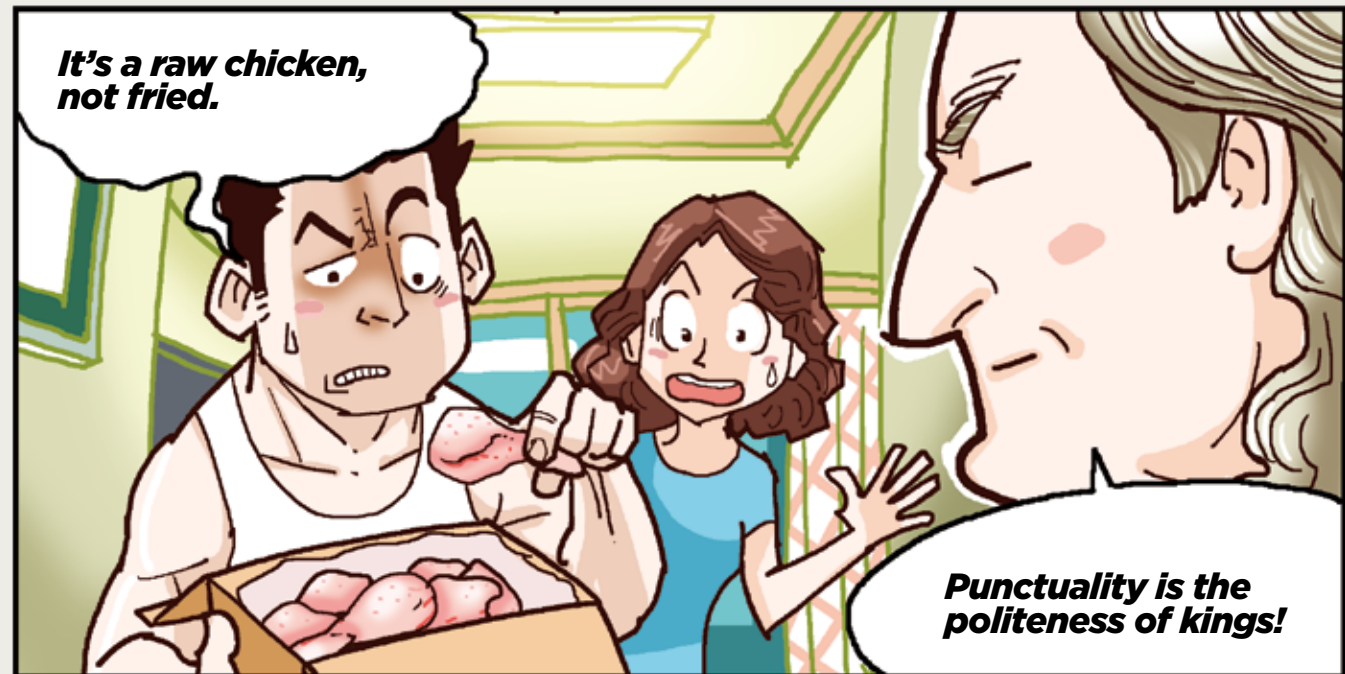
Louis XVIII(루이 18세)

그림. 임성훈



루이 18세 : 시간엄수는 군주의 예절이다.

루이 18세 : 10분 배달 서비스 루이치킨입니다!
소비자 : 정말 주문한지 10분 만에 배달 왔네!



소비자 : 근데 치킨이 아니라 생닭이네.
루이 18세 : 시간 엄수는 군주의 예절이라!

EXPO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Bio Industry Expo Osong Korea 2014

생명, 아름다움을 여는 비밀

9월 오송에서
바이오 세상으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2014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 2014.9.26(금)~10.12(일) / 17일간 **주최** 충청북도, 산업통상자원부, 청주시
장소 오송생명과학단지 (KTX오송역 인근)